

---

# Post-2020 글로벌 해양환경규제 동향

Post-2020 Global Marine Environmental Regulation Trends

박수진 · 김지윤 · 이해영 · 김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b>저자</b>	<b>박수진, 김지윤, 이해영, 김민</b>
<b>내부연구진</b>	연구책임자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지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이해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김 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원

**연구기간** 2022. 5. 16. ~ 2022. 12. 31.

#### 보고서 집필내역

<b>연구책임자</b>	박수진 제1장, 제2장 제2절, 제3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3절, 제4장 제1절 일부, 제2절 일부, 제5장
<b>내부연구진</b>	김지윤 제2장 제1절, 제3절 이해영 제3장 제2절 일부, 제4장 제2절 김 민 제4장 제1절 일부, 제3절

<b>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b>	강선주 국립외교원 연구부장 직무대리 구경아 한국환경연구원 실장 김기현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 과장 김민수 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본부장 김홍균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목진용 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박찬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형철 극지연구소 부소장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지연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본부장
---------------------------	---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

# 목차

## 01 | 분석개요 \_1

## 02 | 플라스틱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_7

제1절 유엔환경총회	7
1. 개요	7
2. 제1차~제4차 유엔환경총회 주요 결과	8
3. 현안 및 쟁점	15
4. 정책적 시사점	17
제2절 제1차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	18
1. 개요	18
2. 현안 및 쟁점	20
3. 정책적 시사점	25
제3절 국제해양폐기물 컨퍼런스	27
1. 개요	27
2. 현안 및 쟁점	29
3. 정책적 시사점	33

## 03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_35

제1절 유엔 해양컨퍼런스	35
1. 개요	35
2. 현안 및 쟁점	36
3. 정책적 시사점	41
제2절 유엔 BBNJ 정부간회의	42
1. 제1차~제4차 정부간회의 개관	42
2. 현안 및 쟁점	44
3. 정책적 시사점	53

제3절 생물다양성협약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55
1. 개관	55
2. 현안 및 쟁점	56
3. 정책적 시사점	62

## 0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_65

제1절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65
1. 개요	65
2. 현안 및 쟁점	69
3. 정책적 시사점	73
제2절 IMO 온실가스 규제	74
1. 개요	74
2. 현안 및 쟁점	77
3. 정책적 시사점	82
제3절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회의	83
1. 개요 : 회의체 목적 및 기능 등	83
2. 현안 및 쟁점	84
3. 정책적 시사점	87

## 05 정책방향 \_89

제1절 분석결과 요약	89
제2절 정책제언 및 후속과제	92

---

## 표 목차

〈표 2-1〉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일정 .....	19
〈표 2-2〉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 역대 개최국 및 참석 규모 .....	28
〈표 2-3〉 호놀룰루 전략 주요 내용 .....	29
〈표 2-4〉 제7차 IMDC 기술세션 .....	33
〈표 4-1〉 IMO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조치 후보군 .....	75
〈표 4-2〉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주요내용 .....	80
〈표 4-3〉 녹색항로(Green Corridor) 기준(안) .....	81
〈표 4-4〉 2021년 유엔 ICP 세부 의제 .....	84
〈표 5-1〉 주요 글로벌 해양환경규제 .....	91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	4
〈그림 1-2〉 주요 분석대상 글로벌 해양환경규제 및 트렌드 .....	5
〈그림 2-1〉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 일정 .....	19
〈그림 2-2〉 제1차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	24
〈그림 2-3〉 제6차 IMDC 현장 사진 .....	31
〈그림 2-4〉 제7차 IMDC 현장 사진 .....	32
〈그림 3-1〉 2022년 제2차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 .....	40
〈그림 3-2〉 제4차 유엔 BBNJ 정부간회의 .....	43
〈그림 3-3〉 제5차 유엔 BBNJ 정부간회의 .....	43
〈그림 3-4〉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체계 .....	58
〈그림 3-5〉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	62
〈그림 4-1〉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	73
〈그림 4-2〉 2022년 제79차 IMO MEPC .....	76

# 01

## 분석개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요 국가들은 재정지출을 빠르게 확대함으로써 보건·경제 위기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인플레이션, 긴축적인 정책 대응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분절되고 전 세계가 블록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1)</sup> 한편, 2020년부터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린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2021년 기준으로 5.4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과 결합하여 ‘다중의 상호연계된 글로벌 위기(Multiple and Interlinked Global Crisis)’로 확대되었다. 2020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회복을 둔화시킨 동시에 빈곤퇴치와 기후변화 대응 여력을 약화시켰다.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저개발국의 낮은 재정 여력과 유동성 부족은 향후 유엔SDGs 이행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sup>2)</sup>

한편, 기후위기, 플라스틱 오염, 외래종 및 신종 병원체 등 보건위기 및 생물안전(Bio Security) 등 글로벌 해양환경 현안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가는 ‘우리의 해양, 우리의 지구(our ocean, our planet)’를 지키기 위한 중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2), 글로벌 이슈 브리프 2022년 12월 호, pp. 8-10.

2) 위의 책, pp.59-64.

---

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해양환경 문제를 다루는 기존 방식은 ‘협력과 거버넌스 기반 대응방식(Cooperation and governance-based response approach)’을 강조하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규칙 중심의 다자주의적 해결방식(Rule-based multilateral solution approach)’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요컨대, 해수면·해수온 상승 등 기후위기의 대응, 해양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위험·유해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유류오염 등 해양오염의 예방·저감,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정착,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회복 등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협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범지구적 차원의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삶의 기반인 연안과 해양, 대양 그리고 연안·해양에 거주하는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직면한 현안과 위기는 어느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2012년 ‘유엔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Rio+20)’ 이후 2013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sup>3)</sup>, 2014년 나고야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 등 글로벌 해양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5년 파리협정 채택을 계기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수자원 위기, 사회기반시설 파괴,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기후리스크에 대한 평가·관리와 기후변화 적응역량이 강조되고 있다.<sup>4)</sup>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규칙(rule book)’을 채택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실질적·세부적 이행점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최근 들어 ‘해양과 기후 변화 대화(Ocean and Climate Change Dialogue)’, ‘해양과 기후 우

---

3)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일명 국제수은협약이라고도 일컬어진다. 2022년 기준으로 147개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4) 채여라(2020), pp.1-4.



호그룹 회의’ 등 해양과 기후 관련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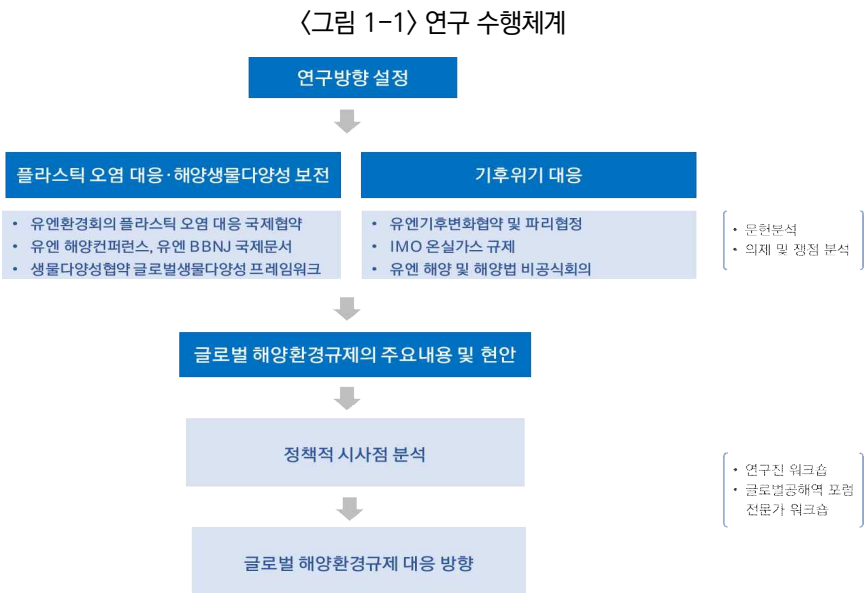
한편, 2021년과 2022년에 개최된 제3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해양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로 결정하였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은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해양환경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모니터링 및 보고, 과학적 정보 및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 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가 2022년 11월 제2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5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목표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의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가 채택되었다. GBF는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목표와 23개 실천 목표,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2010년에 나고야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목표(2011-2020)’와 차별화된다. 더불어 제15차 당사국총회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축소,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자원 동원 및 개도국 지원, 역량개발 및 과학기술 협력 등에 대한 글로벌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편, 2004년 유엔총회 결의와 2015년 제9차 작업반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문서를 성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해와 심해저, 즉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인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국제문서를 마련하기 위한 유엔

BBNJ(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유엔 BBNJ 국제문서’ 성안을 위한 협상은 2018년 9월 제1차 정부간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8월 제5차 정부간회의까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국가간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기후위기, 2030년 새로운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양경계획정 등 해양법적 이슈와 같이 2020년 이후의 핵심적인 글로벌 해양환경규제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분석과 주요 의제 및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진 워크숍과 제3회 글로벌 공해역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향후 정책추진 방향도 제시하였다. <그림 1-1>은 본 연구의 수행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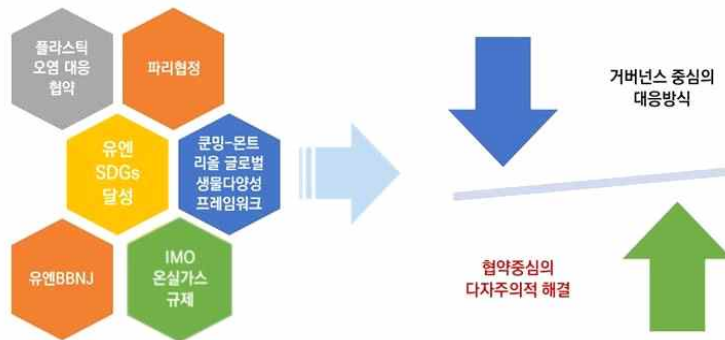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한편, 본 보고서는 2020년 이후 글로벌 해양환경규제에 대응한 국가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를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유엔 환경회의, 제1차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정부간 위원회, 국제해양폐기물 컨퍼런스 등 플라스틱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규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유엔 해양컨퍼런스와 유엔 BBNJ 정부간회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환경규제의 논의 동향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파리협정, IMO 온실가스 규제, 유엔 비공식회의 등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환경규제를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최근 국제환경규제를 비교·분석하고, 글로벌 해양환경규제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1-2〉 주요 분석대상 글로벌 해양환경규제 및 트렌드



자료: 저자 작성



## 02

# 플라스틱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 제1절 유엔환경총회

---

#### 1. 개요

‘유엔환경총회(UNEA: UN Environment Assembly)’는 격년 주기로 193개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의 사업계획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다.<sup>5)</sup>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유엔환경계획의 역할을 강화하고 격상하기로 결정되었고, 2013년 12월 제68차 유엔총회는 UNEP 집행이사회를 유엔환경총회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sup>6)</sup> 유엔환경회의는 글로벌 환경의제를 설정하고 포괄적인 정책 지침(guidance)을 제공하며, 새로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정의한다. 또한 유엔환경회의는 정책적 검토, 대화 및 경험교환을 수행하며 유엔환경계획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전략적 지침을 설정하며 환경목표 달성과 자원 동원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역

---

5)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보도자료(2022.3.2.)(검색일: 2022. 10. 2.)

6) 환경부 보도자료(2014. 6. 25.)(검색일: 2022. 12. 26.)

---

할을 담당하고 있다.<sup>7)</sup>

유엔환경총회는 2014년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2022년 3월 제5차 회의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했다.<sup>8)</sup> 그동안 유엔환경총회에서 다루어진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주요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 제1차~제4차 유엔환경총회 주요 결과

### 1) 제1차 유엔환경총회

제1차 유엔환경총회는 2014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케냐 나이로비 UNEP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UN 국제기구, 각 국가별 정부대표단, NGOs 등이 참석했으며, 지속가능발전 목표, 2015년 이후 개발의제, 불법 야생동·식물 거래,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등 전 세계 환경 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논의는 노르웨이가 ‘해양쓰레기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PML: Global Partnership on Marine Litter)’에 따라 국제협력 강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결정문 초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또한 노르웨이는 해양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조치와 기술에 관한 지식강화 연구를 수행할 것을 UNEP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노르웨이의 제안을 지지했고, 이 이슈를 해양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는 해양폐기물 문제로 더 폭넓게 다룰 것을 제안했다. 호주, 칠레, 스위스, EU도 이 제안을 환영했으며, 문

---

7) 유엔환경총회의 홈페이지(검색일: 2022.11.30.)

8)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3.3.)(검색일: 2021.11.17.)

서 개발을 요청했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문에는 ‘사전예방 접근법(precautionary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플라스틱의 부적절한 관리와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위험과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정부, 정부간 조직, NGOs, 산업계, 그 외 관련 주체들이 해양쓰레기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PML)에 협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미세플라스틱의 기원과 운명, 그리고 이들의 생물다양성, 해양생태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더 많은 지식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더불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가 및 지역적 실천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는데, 요청에 따라 국가들을 지원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기존 작업을 토대로 가장 최근 연구와 데이터를 고려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스톡홀름 및 바젤 협약 사무국, 오염관리, 화학물질,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관계 기관, 생물다양성협약과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협약(UN CMS : UN Environment Programme-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사무국, 지역해 협약, 실천계획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1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하도록 장려하며, 정부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 즉, 적절한 경우 법률제정, 국제협약 시행, 선박기인 폐기물의 적절한 수용 시설 제공, 폐기물 관리 관행 개선, 해변정화활동 지원, 정보, 교육, 대중인식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 정부간 기관, 과학계, NGOs, 민간부문, 그 외 이해관계자가 사무총

---

장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재정적, 그 외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제2차 총회까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9)</sup>

## 2) 제2차 유엔환경총회

제2차 유엔환경총회는 2016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케냐 나이로비 UNEP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중 환경 분야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회의 성과물로서 장관급회의 결과문서와 24개의 환경정책 결의문(resolutions)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결의문의 주요 내용에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야생동식물과 부산물의 불법거래 근절, 음식물 쓰레기 저감 및 재이용 등이 담겨 있다.<sup>10)</sup>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그룹(African Group)과 NGO 메이저 그룹(NGO Major Group)은 육상기인 오염원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관련 문서의 제안된 효과성 평가 범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대신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모범사례 평가를 제안했다. NGO 메이저 그룹은 플라스

---

9)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a), pp. 7-8.

10) 환경부 보도자료(2016.5.30.)(검색일: 2022. 8. 28.)



틱 처리센터의 관행으로 인한 잠재적 환경 훼손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영문 표기를 “marine plastic debris”에서 “marine plastic litter”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해양환경에서 플라스틱이 “100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 “매우 느리게 분해된다”라는 것에 동의했다.

최종 결의안은 해양환경에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의 정도, 원인, 부정적 영향,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가능한 조치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UNEP과 관련 협약, 국제문서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 결의안은 모든 수준의 정부가 산업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더욱 발전시키고,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개선, 예방, 환경정화 연례 캠페인을 만들어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품 제조업체 등에게는 마이크로비즈와 퇴비로 만들 수 있는 폴리머를 포함해 제품의 전주기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UNEP에게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 거버넌스 전략과 접근법의 효과를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sup>11)</sup>

### 3) 제3차 유엔환경총회

제3차 유엔환경총회는 201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케냐 나이로비 UNEP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오염 없는 지구를 향하여(Toward a pollution-free planet)’를 주제로 하여 해양오염,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주류화, 환경보건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로 결의문과 선언문이 채택되었다.<sup>12)</sup>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11)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b), pp. 6-7.

12) 환경부 홈페이지(2017.12.6.)(검색일: 2022. 12. 28.)

---

과 같다. 그동안 다수의 국가들이 해양환경에 마이크로비즈 오염 저감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지역적 실천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한 선택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디자인과 품질 기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을 때의 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에 지지를 표했다. 각국 대표단은 국가의 역량에 따라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쓰레기 글로벌 파트너십(GPML : Global Partnership on Marine Litter)’의 불투명한 미래를 고려하여 UNEP 사무총장에게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서 UNEP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논의했다. 제4차 유엔환경총회를 위한 해양쓰레기 대응 관련 국제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옵션을 권고하기 위해 임시작업반(open-ended ad hoc working group)을 구성함에 있어 대표단은 특히 예산, 기존 문서와의 협업 기회, 구체적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등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최종 결의안은 해양환경에서의 마이크로비즈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 산호초 이니셔티브’의 권고사항에 주목했으며, 해양생태계에 미세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의 수준 및 영향에 관한 지식 강화가 긴급히 필요한 것에 더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 속도와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에 주목했으며,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양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인식했고,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대체품을 연구해 적용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면서 책임감 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촉구했다.

또한, 이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다. 즉,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환경에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 정책 및 조치를 적절한 규모로 우선시 추진하여야 한다. 더불어 해양쓰레기

와 미세플라스틱의 측정 및 모니터링에 대한 공통된 정의와 조화된 표준 및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하고,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발생 예방, 재활용률 증가, 제품 재설계 및 재사용 등 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며, 해양환경에서 실현가능한 곳에서 정화활동을 우선시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결의안은 정부, 지역기관, 민간부문, 해양쓰레기 글로벌 파트너십 등 시민사회 간 협력을 장려하며, 다음의 사항을 통해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UNEP의 역량강화 및 활동을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이는 환경 내에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의 근원 및 현존상태에 대한 접근가능한 데이터를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요청에 따라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국가를 지원하며,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저감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다른 UN 기관들과 긴밀히 연락하고, 상황에 따라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약속을 작성하고 SDG 목표 14.1 달성을 위한 UNEA의 작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그 범위의 개요를 제4차 유엔환경회의에 제공하도록 했다.<sup>13)</sup>

#### 4) 제4차 유엔환경총회

제4차 유엔환경총회는 2019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케냐 나이로비 UNEP 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약 170여개 국가의 정부 대표단과 기업 및 시민사회 등에서 4,700여 명이 참석했다. 본 총회의 주제는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혁신(Innovative solutions for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으로 다양한 환경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로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소, 화학

13)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 pp. 6-7.

---

물질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혁신과 지식공유 등 26개의 환경정책 결의문이 채택되었다.<sup>14)</sup>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 일본, 스리랑카에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주제로 결의안을 제안했다.

UNEA는 제3차 총회에서 구성된 임시작업반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기로 했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해양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장기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기존 활동 및 조치를 검토하고,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할 때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자원 또는 매커니즘을 파악하고, 자원 인벤토리 개발, 폐기물 관리 개선, 인식 증진, 혁신 증진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와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도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기존 및 잠재적 대응 옵션과 활동들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환경 관리 그룹이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해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가, 모든 UN 관계 기관, 프로그램, 이니셔티브의 맵핑을 제공해 임시작업반에 참여 및 기여하도록 요청했다.

UNEA는 이용가능한 자원 내에서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여 UNEP 내에 다자이해관계 플랫폼을 만들어 전주기 접근법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을 장기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다자이해관계자 플랫폼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험을 공유하고 행동을 조정하기 위한 포럼으로서 역할을 하고,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폐기물의 육상 및 해상 기인 원인물질이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에

---

14) 환경부 보도자료(2019.3.16.)(검색일: 2022.7.1.)

관한 평가, 지침자료, 실행계획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인식을 증진시키고, 해양쓰레기 관련 기술 및 과학적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지하고, 기존 과학 매커니즘 간 협력을 증진하고, 이용가능한 자원 내에서 실행 계획, 프로토콜, 파트너십, 기타 활동을 통해 해양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해협 약 및 프로그램에서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UNEP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했다. 이용가능한 자원 내에서 그리고 기존의 관련 매커니즘 작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관련 과학 및 기술적 지식을 즉시 강화하고, SCP Patterns에 관한 10개년 프로그램 프레임워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기준 및 라벨 정보를 주고, 기업 및 소매업체가 지속가능한 관행과 제품에 전념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는 정보 틀을 이용하고 SCP를 육성하도록 인센티브를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플라스틱 사용 및 제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며, 결의안 이행에 대한 진행상황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sup>15)</sup>

### 3. 현안 및 쟁점

제5차 유엔환경총회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1부, 2부로 나누어 개최되었는데, 1부는 2021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비대면 총회로 진행되었으며, 예산 등 행정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자리였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 회의(UNEA-5.2: 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는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다.<sup>16)</sup> 제5차 총회에서는 자연을

15)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 pp. 6-7.

16) UNEP 홈페이지,(검색일: 2022.7.1.)

---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되었고,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 명이 대면 및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는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첫 국제회의로서,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sup>17)</sup> 제5차 총회에서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자연기반해법 등 환경의제 총 14개의 결의안과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되었다.<sup>18)</sup>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들은 앞으로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을 제정하기로 기념비적인 합의에 도출하였다.<sup>19)</sup>

제1차 총회부터 4차 총회까지는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결의안을 도출해 왔는데, 이번 제5차 총회에서는 해양을 포함하여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적(full life cycle) 관리’에 초점을 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성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논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국제협약의 적용범위, 요소, 향후 절차 등에 각각 이견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회원국들은 향후 2024년 협약 성안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22

---

17)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보도자료(2022.3.2.)(검색일: 2022.10.2.)

18) UNEP/EA.5/28

19) UNGA(2022a)

년 말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시작하였다. 협상위원회는 협상 과정에서 협약 목표의 구체화, 상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등 순환경제 접근을 고려한 플라스틱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방법 모색, 해양환경에서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방안 모색, 플라스틱 오염 예방·저감·제거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촉진, 모범사례 공유, 국가 및 국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 마련,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검토, 전 이해관계자 행동촉구, 관련 과학정보 및 평가를 제공할 메커니즘 탐색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한정에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개했다.<sup>20)</sup>

#### 4. 정책적 시사점

2014년 제1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되어 2022년 회원국 간 입장차를 극복하고 해양폐기물 문제에 국제사회가 함께 동참하자는 데 적극 공감의 결과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관리 대상 물질의 범위가 “해양”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로 결정된 만큼 관련된 정부 각 부처의 공동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등 모든 이해관계 부처 및 산업계, 시민단체 간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해양폐기물의 통합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는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에서 해양폐기물 관련 안전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역할도 하는데,

20)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보도자료(2022.3.2.)(검색일: 2022.10.2.)

---

해양폐기물 국제협약 마련이 결정되고 성안 마련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 잘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부처간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가간 협상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국내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의 균형있는 참여와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이후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비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2절 제1차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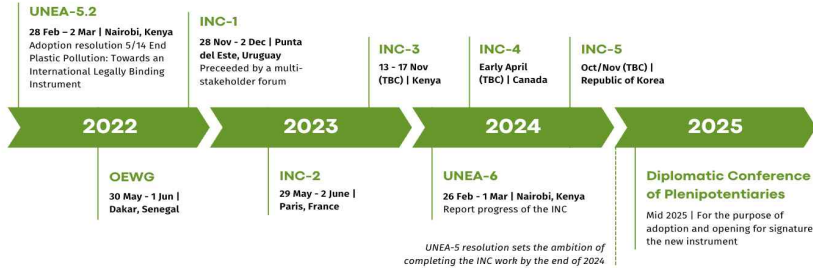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첫 국제회의로서,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sup>21)</sup>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시 개방형 전문가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2월까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는 2022년 2월의 제5차 유엔환경총회와 2022년 5월의 임시 개방형 작업반회의를 거친 후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개발을 위한 정부간협상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었다.

---

21)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보도자료(2022.3.2.)(검색일: 2022. 10. 2.)



〈그림 2-1〉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성안 일정



자료: Geneva Environment Network(2022.12.7.)(검색일: 2022.12.12.)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 개발을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 폰타델 에스테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정부간협상회의는 약 190개 유엔 회원국 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sup>22)</sup>

〈표 2-1〉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일정

회차	개최시기	개최지	비고
1	2022.11.~12.	우루과이, 폰타델에스테	190개국 2,500명 참석
2	2023.5.~6.	프랑스, 파리	-
3	2023.11.	케냐	잠정 일정 (변동가능)
4	2024.4.	캐나다	잠정 일정 (변동가능)
5	2024.10.~11.	대한민국	잠정 일정 (변동가능)

자료: Geneva Environment Network(2022.12.7.)(검색일: 2022.12.12.)

22)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보도자료(2022.12.3.)(검색일: 2022. 10. 2.)

---

## 2. 현안 및 쟁점

### 1) 핵심요지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1)에서는 페루와 에콰도르가 의장 선출 문제에 대해 쉽게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페루가 제1차~제3차 INC회의의 의장을 맡고, 제4차~5차 INC 및 전권 외교회의의 의장은 에콰도르가 맡기로 결정되었다. 참가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안 5/14에 따라 협약 마련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약 성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국가행동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의 중요성에 공동인식을 표명하였다. 한편, 국제환경법 원칙인 ‘오염자 부담원칙’과 ‘생산자재활용책임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확대, 유해 플라스틱 또는 첨가제의 사용금지 또는 철폐의 필요성 등 생산 측면에서 의무를 제기하는 동시에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단계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해 EU는 생산단계를 중시하였으나 일본은 폐기물의 처리단계를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다수 국가들은 국가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요구하였으나, 개도국들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강조하고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수단을 조기에 논의할 것을 촉구하였다.<sup>23)</sup>

제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는 공식협상의 첫 회의로서 협약의 골격과 구성 요소에 대한 각국의 개괄적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절차에 대한 의견

---

23) UNEP 홈페이지(검색일: 2022.12.10.)

을 교환하였다. 특히, 각국은 ① 협약의 범위·목적·구조, ② 주요 의무사항 및 규제, ③ 자발적 조치, ④ 국별행동계획, ⑤ 이행수단, ⑥ 이행검토 및 모니터링, ⑦ 과학·기술 협력, ⑧ 다층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물관리까지 전주기(life-cycle)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순환경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협약이 성안되기를 촉구하였다.<sup>24)</sup>

## 2) 의제별 논의결과

### (1)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UNEA 결의 5/14 취지에 따라 플라스틱 전주기가 협약의 범위에 포함된다는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확인하였으나, 전주기의 범위나 정의, 원료 채취(feedstock sourcing)의 포함 여부, 플라스틱, 폴리머, 첨가제 등의 용어정의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EU는 나노플라스틱,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플라스틱 펠렛도 협약의 적용범위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중국은 플라스틱의 종류와 용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종류나 용도에 적합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협약 성안을 강조하였고, 미국, 호주 등도 모든 플라스틱이 해로운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하였다.<sup>25)</sup>

24)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보도자료(2022.12.3.)(검색일: 2022. 10. 2.)

25) IISD, INC-1 Final, Earth Negotiations Bulletin, Vol.36, No.7, 2022, p. 3, 김기현(2022).

---

## (2) 협약의 목적 및 원칙, 협약 구조

우호국 연합 및 미국은 ‘환경 보호’와 ‘인체 건강 보호’를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일본은 ‘해양 등 환경에 추가적인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제시하였다.<sup>26)</sup> 노르웨이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EU도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같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최종 목적(overarching objective)을 설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수 국가들은 오염자 부담원칙, 생산자책임, ‘오염처리위계(waste hierarchy)’<sup>27)</sup> 등 자원순환제도에서 주로 활용되는 원칙을 언급하였다. 그밖에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 ‘사전예방주의 원칙’을 협약 원칙으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협약의 유형 및 구조와 관련해서, 미국은 ‘국가중심적 접근법’을 강조하면서 협약 구조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다. 반면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등 우호국 연합 주요국가들은 ‘규범적 협약’을 선호하며, 부속서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비준없이 협약을 신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특정협약 모델(specific convention model)’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sup>28)</sup>

## (3) 의무사항, 규제조치, 자발적 조치, 국별 행동계획

업스트림(up stream), 미드 스트림(mid stream), 다운스트림(down stream) 등 조치별 의무사항 및 규제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스

---

26)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에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르웨이, 르완다, EU, 스위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6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플라스틱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 홈페이지(검색일: 2022.12.15.)

27) ‘오염처리위계’는 폐기물의 발생방지 > 최소화 > 재사용 > 재활용 > 폐기 순서로 자원순환 조치의 위계질서를 도식화한 원칙을 말한다.

28) IISD, INC-1 Final, Earth Negotiations Bulletin, Vol.36, No.7, p. 3-4, , 김기현(2022).

트립 관련 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조치, 종류에 무관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 설정, '인체에 유해한(harmful to human health) 첨가제 및 화학물질 목록'의 작성과 금지 또는 단계별 철폐, 재사용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제 공동규범 및 기준 설정, 플라스틱세(plastic tax) 등을 통한 생산감축 노력 등에 대한 국가별 의견이 표명되었다.

미드스트림 의무 및 규제조치와 관련해서는 플라스틱의 전 가치사슬에 걸쳐 플라스틱 첨가제 및 화학물질 등 성분 표기 강화 및 성분 표기방법 일원화(harmonization)를 통한 투명성 제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 기준 마련, 플라스틱 폐기물의 불법적 덤핑 및 교역 방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운스트림 관련 의무 및 규제조치로는 이미 유출된 해양 폐기물의 수거조치, 폐기물의 수거·재활용·폐기를 위한 공통 기준 또는 최소기준의 마련, 해양 또는 초국경적으로 유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 부과, 환경 유출 대응조치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국별 행동계획은 국제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일정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나 정성적, 정량적 목표와 이행 일정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sup>29)</sup>

#### (4) 이행수단 및 모니터링·평가

다수의 개도국은 보고 및 평가 의무를 포함한 전주기에 걸친 의무사항 및 규제조치의 실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기술 이전을 강조하였는 바, 특히 플라스틱 전주기의 단계마다 이행을 위한 지원과 데이터 수집·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였다. 반면, 선진국은 별도 재정기금 마련에 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공공 및 민간금융, 다자 개발은행, 금융시

29) IISD, INC-1 Final, Earth Negotiations Bulletin, Vol.36, No.7, p. 4-7, 김기현(2022).

장 등 다양한 재원 및 오염자 부담원칙 등을 활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다수 국가는 국별행동계획을 이행 및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가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국별 보고서 제출 의무 설정과 플라스틱 전문가 및 당사국총회를 통한 동료심사(peer review) 시행 등이 모니터링·평가체계의 기본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0)</sup>

#### (6) 이해관계자 참여 및 행동 아젠다

대다수의 국가는 다층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진이 협약에 대한 성안 협상이나 협약 이행 성공의 핵심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우리나라, 영국, 일본 등은 회원국 주도의 협상에 되어야 하며 협사의 주체는 유엔 회원국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노르웨이, 스위스,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해관계자포럼 보다 개도국 대표단의 회의참석 경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1)</sup>

〈그림 2-2〉 제1차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자료: (좌) EcoWatch 홈페이지(검색일: 2022.12.10.), (우) IISD 홈페이지(검색일: 2022.12.10.)

30) 위의 자료

31) 위의 자료

### 3) 협상그룹 동향

‘우호국 연합 비공식회의’에서 미국은 국가행동계획 제출 의무와 충실한 보고 및 검증체계를 통해 이행을 확인하는 ‘bottom up 접근법’을 제시하였고, 일본, 싱가포르 등은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우호국 연합은 공동의무 및 규칙·제정을 목표로 유해한 플라스틱 및 첨가제의 생산 금지, 감량 및 대체, 공정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폴리머 및 첨가제의 정확한 성분 추적(traceability)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기준 마련, 소비자 인식 제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미국,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EPPIC 2040(End Plastic Pollution International Coalition) 연합’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종식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기후변화 파리협정체제와 유사한 ‘국가중심적 접근법(country-driven approach)’에 기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sup>32)</sup>

### 3. 정책적 시사점

해양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심각한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오염을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과 함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3대 위협요인(Triple Planetary Crisis)’으로 지정하였다.<sup>33)</sup> 유엔환경계획은 2021년 10월에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전지구적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OECD는 2022년에 ‘플라스틱 오염 및 대응방안에 관한 경제모델링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해양플

32) 미국 주도의 EPPIC 2040에는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33) UNEP 홈페이지, The triple planetary crisis(2020.7.14.)(검색일: 2022. 9. 3.)

---

라스틱으로 인한 위해성 평가·관리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엔환경계획(2021)의 ‘플라스틱 오염 2060 전망(From Pollution to Solution)’과 OECD(2022) ‘글로벌 플라스틱 전망(Global Plastic Outlook)’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2020년 대비 206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3배로 급증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 유출이 2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향후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협상 종료시 해당 협약의 채택 및 발효 절차를 진행할 것과 협상위원회의 협상 결과를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보고할 것이다.<sup>34)</sup>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 세계 4위, 플라스틱 소비 세계 3위 국가로서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사회경제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국내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의 성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익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의 경제적 전환 및 적응이 필요한 경제주체인 선진국에 소재한 제조업체와 개도국, 시민사회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산업계의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및 친환경 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2022년 12월 8일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본부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주제로 ‘제9차 그린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정

---

34) 환경부 보도자료(2022.5.19.)(검색일: 2022. 11. 3.)



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순환경제 원칙에 입각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 협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sup>35)</sup>

### 제3절 국제해양폐기물 컨퍼런스

#### 1. 개요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IMDC: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는 1984년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주최로 시작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해양폐기물 관련 국제 학술대회이다.<sup>36)</sup> 첫 컨퍼런스 이후 지금까지 비정기적으로 총 7차례 진행되었다. 제1차부터 제6차까지는 미국에서 개최되었고, 가장 최근 2022년 9월에 개최된 제7차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에서 열렸다. 이는 IMDC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개최한 것으로, 그간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노력이 높게 평가받아 개최지 선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5) 제9차 그린라운드 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도전과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이 조속히 성안되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업계,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표명하였다. 외교부 뉴포커스(2022.12.9.)(검색일: 2022.12.10.)

36) 제7차 IMDC 홈페이지(검색일: 2022. 12. 26.)

〈표 2-2〉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 역대 개최국 및 참석 규모

회차	개최일	개최지	참가규모
1	1984.11	미국, 호놀룰루	8개국 125명 참석
2	1989.04	미국, 호놀룰루	-
3	1994.05	미국, 마이애미	-
4	2000.08	미국, 호놀룰루	-
5	2011.03	미국, 호놀룰루	39개국 440명 참석
6	2018.03	미국, 샌디에고	54개국 700여명 참석
7	2022.09	대한민국, 부산	89여개국 1,000여명 참석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9.19.)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해양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 및 인식하고, 각 국가의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며,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이다.

제1회에는 8개 국가에서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이후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국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양폐기물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2011년 제5차 컨퍼런스부터는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 Programme)과 공동 개최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해양폐기물 관련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했다.<sup>37)</sup>

3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9.19.)(검색일: 2022.12.26.)

## 2. 현안 및 쟁점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는 위상에 걸맞게 전 세계의 주요 해양 분야 전문가가 대규모로 참석하며, 이들은 약 10여개의 주제별 세션에서 해양쓰레기 현황과 분포, 해양쓰레기가 해양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학술연구 결과부터 해양폐기물 예방 및 수거, 해양폐기물 저감에 대한 인식 증진 등 각 국가별 정책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2011년에는 제5차 IMDC가 열렸는데 결과물로 해양폐기물 예방과 관리를 위한 “호놀룰루 전략(Honolulu Strategy)”이 채택되었다. 이 전략은 3대 목표 ①육상기인 해양폐기물의 발생량 및 영향 저감, ②해상기인 해양폐기물의 발생량 및 영향 저감, ③해양폐기물의 현존량 및 영향 저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총 19개의 세부 전략이 담겨 있다.<sup>38)</sup> 이 전략은 국가 해양쓰레기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4~2018)’ 수립할 때 이 전략을 활용하였다.<sup>39)</sup>

〈표 2-3〉 호놀룰루 전략 주요 내용

목표	세부 전략
[목표 A] 육상기인 해양폐기물의 발생량 및 영향 저감	A1 해양폐기물의 영향 및 고형폐기물(solid waste) 관리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
	A2 고형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장기반 수단의 도입 및 지원
	A3 폭풍우시 강·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최적의 실행체계 확립
	A4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개발·강화·실행
	A5 강·하천 지류로 유입되는 쓰레기 및 우수·하수 처리 계통 관련 법규 체제 개선
	A6 쓰레기 투기 및 관리에 관한 허가기준 및 규정의 집행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A7 해양폐기물이 많이 집적되는 해변 및 수역 등에서 정기적인 청소 실시

38)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9.19.)(검색일: 2022.12.26.)

39) 해양수산부해양산업정보포털 홈페이지(검색일: 2022. 12. 26.)

목표	세부 전략
[목표 B] 해상기인 해양폐기물의 발생량 및 영향 저감	B1 해양폐기물의 영향, 예방, 관리에 대한 해양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시행
	B2 해양 투기 최소화 및 적절한 수용 처리시설(해상 집하장 및 항구에서의 집하 시설 등)의 개발·확대
	B3 선박의 방치, 화물·폐기물·어구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관산업의 최선 관리사례(Best Management Practices) 개발 및 강화
	B4 폐어구 영향을 줄이기 위한 어구 개량 및 대안적 기술의 개발 및 홍보
	B5 해상기인 폐기물 감소를 위한 법률 및 정책 개발 강화, MARPOL Annex V의 의무사항 이행
	B6 국내(중앙, 지방) 법률과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집행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목표 C] 해양폐기물의 현존량 및 영향 저감	C1 해양폐기물 영향 및 수거에 관한 교육 및 아웃리치 시행
	C2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수거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의 개발 및 홍보
	C3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에 대한 공동관리 역량 강화
	C4 폐어구 및 기타 대규모 해양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개발 및 확대
	C5 해양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기 위한 지역해/국가/지방정부 단위의 합리적인 메커니즘 수립
	C6 해안·침적·부유 해양폐기물의 수거

자료: 해양수산부 외(2022), p.2.

최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해 해양폐기물이 해양생태계를 넘어 식품 안전, 국민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한편 유엔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요 환경이슈를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인 유엔환경총회(UNEA: UN Environment Assembly)에서도 2014년부터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18년 개최된 제6차 IMDC부터 참여국가와 참석자 규모가 전 회차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 해양폐기

물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규제 마련 등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6차 컨퍼런스는 2018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진행되었으며 54개국에서 약 730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술회의는 총 10개의 주제 즉, ① 모니터링 및 시민과학, ② 연구 및 미세플라스틱·초미세 합성섬유, ③ 예방 및 민간부문 협업, ④ 기술 및 혁신, ⑤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⑥ 효과적인 법·규정·정책의 실행, ⑦ 수거·처리, ⑧ 일회용 제품 관련 정책·법·규정, ⑨ 유실어구, ⑩ 혁신사례로 구분되어 74개의 세션이 편성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구두발표 400여 편과 포스터 발표 180여 편이 진행되었다.<sup>40)</sup> 우리나라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등에서 해양쓰레기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국가의 해양쓰레기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으로 입증한 사례, 폐어구 발생원인 및 대응정책에 대한 어업인 인식조사 결과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sup>41)</sup>

〈그림 2-3〉 제6차 IMDC 현장 사진



자료: 동아시아바다공동체홈페이지(검색일: 2022. 12. 26.)

40) 해양수산부 외(2022), p.3

41) 동아시아바다공동체 홈페이지b(검색일: 2022. 12. 26.)

그리고 2022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제7차 IMDC가 열렸는데, 해양수산부와 UNEP가 주최하고,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NOAA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3월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의한 이후라 더욱 주목 받았으며,<sup>42)</sup>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동안 중단되었던 대면 국제행사가 점차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총 89개 국가의 940명의 국내외 해양폐기물 분야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sup>43)</sup> 학술회의 외 기타 부대 행사와 연계행사 참석자까지 고려하면 약 1,300여명에 달하며, 그 중 외국인 참석자 비율은 86%로 매우 높았다. 지난 6차 컨퍼런스 때와 참가자 규모를 비교하면 참가국은 64%, 참가자수는 35% 증가했다.<sup>44)</sup>

〈그림 2-4〉 제7차 IMDC 현장 사진



자료: KMI 내부자료, ‘국제회의 경험공유 워크숍’ KOEM 김영남 박사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2.12.12., p.30.

42)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보도자료(2022.3.2.)(검색일: 2022.10.2.)

4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9.19.)(검색일: 2022.12.26.)

44) KMI 내부자료(2022), ‘국제회의 경험공유 워크숍’ KOEM 김영남 박사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자료, p.24.

이번 7차 컨퍼런스는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연구 및 기술혁신, 관리 정책, 국제협력 등 총 9개의 주제에 대해 115개의 기술세션에서 연구결과와 논문 발표가 800편 이상 있었고,<sup>45)</sup> 이는 지난 6차 컨퍼런스 때 보다 발표 수가 40% 많아졌다.<sup>46)</sup>

〈표 2-4〉 제7차 IMDC 기술세션

구분	주제	세션
Track 1	• 모니터링(Monitoring)	15개
Track 2	• 연구(Research)	19개
Track 3	• 기술 및 혁신(Technology and Innovation)	10개
Track 4	• 교육, 인식 및 커뮤니케이션(Education, Awareness & Communication)	13개
Track 5	• 규제, 법률 및 정책(Regulation, Laws & Policy)	15개
Track 6	• 순환 및 폐기물 관리(Circularity and Waste Management)	11개
Track 7	• 경제, 금융 및 민간부문 참여(Economics, Financing, and Private Sector Engagement)	8개
Track 8	• 해상기인 폐기물(Sea-based Sources)	14개
Track 9	• 국제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	10개

자료: 제7차 IMDC 홈페이지(검색일: 2022. 12. 26.)

### 3. 정책적 시사점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가 1984년 처음 개최된지 약 40년이 되어간다. 그만큼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IMDC 같은 자리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연구 결과를 공유 및 확산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해양폐기물로 인한 오염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을 넘어 이제는 인체의 건강까지 위

45) 제7차 IMDC 홈페이지(검색일: 2022. 12. 26.)

46)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9.19.)(검색일: 2022.12.26.)

---

협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해양폐기물 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률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을 2020년에 제정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시작된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에서는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방향을 자원순환체계로 전환했으며, 2020년 수립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기본계획’에서는 해양폐기물의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다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처럼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으며, 어구·부표보증금제,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반려해변 등 새롭게 도입 및 시행되는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는 전 세계의 해양폐기물 분야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다. 해양폐기물 관리에 앞서있는 국가도 있는 반면 아직은 관리 대응이 미흡한 수준에 있는 국가도 있다. 해양폐기물 이슈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외국기인 해양쓰레기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국가간 협력을 통해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IMDC 등 해양폐기물 관련 국제학회 및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폐기물 대응 현황을 대외에 알리고, 국제기구나 타 국가의 선진 사례를 통해 대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03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 제1절 유엔 해양컨퍼런스

---

#### 1. 개요

2015년 12월 22일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70/226에 따라, 유엔 SDG 14번 목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 (UN Conference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SDG14: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유엔 해양컨퍼런스)’를 세계해양의 날(6.8)을 전후인 2017년 6월 5~9일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유엔 해양컨퍼런스는 SDG 14번의 이행방안을 단독 의제로 하는 최초의 유엔 고위급회의체로서, 제1차 회의는 피지와 스웨덴 대표가 공동의장을 수행하고, 유엔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부문 관계자 약 1,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제1차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를 통해 ① ‘행동촉구선언문(Call for Action)’, ② 파트너십 대화 요약서(Report of Partnership Dialogues), ③ 자발적 기여(Voluntary Commitments) 목록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sup>47)</sup>

---

‘행동촉구선언문’에는 해양의 중요성 인식, 파리협정 이행의 중요성, 유엔 SDG 14를 포함한 SDGs 이행의 중요성, 저개발국가, 내륙국 및 도서국, 아프리카국의 특별한 상황 고려 필요, 국제협력 및 통합적이고 범주제적 접근방식의 중요성, 과학연구 등을 통한 해양 지식 구축의 필요성, 유엔 BBNJ 국제문서 개발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 이행을 통한 해양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촉구,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SAMOA Pathway 등 이행의 중요성, 역량구축·기술이전·재원확보 등의 중요성 등에 대한 행동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제1차 회의 이후 당초 2020년에 제2차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에 개최되었다.

2022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 해양컨퍼런스에는 국가정상, 장관급 이사 등 4,000여 명의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6,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유엔 사무국은 온라인 플랫폼<sup>48)</sup>을 개설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유엔 SDG 14 이행을 위한 자발적 공약(Voluntary Commitment)을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9)</sup>

이하에서는 제2차 유엔 해양컨퍼런스 주요결과와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현안 및 쟁점

### 1) 개최 및 회의의제

‘제2차 유엔 해양컨퍼런스’는 유엔 SDG 14번 목표의 이행을 위한 과학·

---

47) 박수진 외(2017), p. 23.

48) 유엔 해양컨퍼런스 홈페이지, 자발적 공약 등록 온라인 플랫폼(검색일: 2022.10.1.)

49) 위의 자료

혁신 기반 해양행동 강화를 주제로 하여, 일반토의(general debate), 상호 대화(interactive dialogu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앙골라, 팔라우, 콜롬비아, 피지, 나미비아, 벨리즈, 모나코 등은 정상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미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독일, 태국, 카타르, 아르헨티나 등은 장관급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24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회원국들은 케냐의 Uhuru Kenyatta 대통령 및 포르투갈의 Marcelo Rebelo de Sousa 대통령을 공동의장으로 선출하였다.

## 2) 일반토론

해양생태계의 보호, 기후변화 대응, 해양오염 근절 등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유엔 SDG 14번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자발적 공약 및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대다수 회원국들이 공통적으로 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및 수온 상승, ②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③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 ④ 불법어업, ⑤ 연안 침식 등을 주요 해양 문제로 언급하였다. 또한 ① 구속력 있는 조치의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탈탄소화, ②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중단, ③ 해양보호구역(MPA) 설정, ④ 어업 감시 및 통제 강화, ⑤ 맹그로브 숲 및 산호초 재건 등의 조치를 시급히 이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다수 회원국들은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해 재원확보, 관련 국제협약(유엔해양법 협약, 파리협정 등)의 이행, 관련 협의체(UNFCCC, UNEP, WTO 등)를 통한 논의 가속화, 국가적·지역적·전지구적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해양 과학 및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다수 국가들은 제1차 유엔 해양컨퍼런스 이후, 유엔 SDG 14번 목표의 일부영역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행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다.

특히, 다수 국가들은 유엔 SDG 14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의 성공적인 성안 및 국별 계획 발표(national action plan)을 통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 근절, ② WTO 수산보조금 협정 채택 환영 및 IUU 어업 대응 이니셔티브 발족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이행, ③ 빠른시일 내 유엔BBNJ 협정의 채택 촉구 및 2030년까지 전지구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 또는 기타 효과적 관리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30by30 목표’ 달성 등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의 보호, ④ 선박 항로 탈탄소화 등 기후변화-해양 연계성 등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 3) 주요국 입장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탈탄소화, 2030년까지 30% 이상의 MPA 설정 및 플라스틱 오염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며, 불법어업 중단 및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IUU Fishing Action Alliance’를 발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Our Ocean Conference(OOC)의 차기 개최국으로 파나마(‘23년, 제8차), 그리스(‘24년, 제9차), 우리나라(‘25년, 제10차)를 발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저탄소 선박 기술 고도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저개발국과의 협력 등의 노력 및 목표를 소개하고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저감,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기술 및 미세 플라스틱 대응 기술 개발, 블루카본 기반 자연해양 조성기술 개발, 태평양도서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 해양산성화 관측 고도화 지원, 원양어선 감독 관리 시스템 강화, 남미 국가 대상 기후변화 대응 수산양식교육 역량 강화,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해양에너지 ODA 추진, 인도네시아 대상 해양수산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등 총 8개 공약을 발표하고 웹사이트에 등록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자연 유산 파괴, 불법 영토 점거, 불법 자원 채굴, 항구 통제, 연안 기름 유출 등을 비판하고 러시아에 전쟁 범죄 및 해양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조지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 또한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러시아를 규탄하고 군사력 철수를 촉구하였다. 러시아는 유엔 해양컨퍼런스가 유엔 SDG 14번 목표의 달성 현황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회의임을 언급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북극을 포함한 해양 연구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일본은 바다에서 어획되는 어류의 양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어종의 수는 줄어들고 있음을 우려하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050년 경에는 해양생물자원보다 쓰레기의 양이 더 많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일본은 UN FAO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력, 개도국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IUU 어업에 기인한 어획물 반입 금지를 위한 법 마련, 해양 쓰레기 관리 인원 확충 등의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향후 5년 내 31개 해양 및 연안 수역 회복 및 보호 추진, 소규모 도서개발도상국(SIDS)에 대한 지원 강화 계획 등을 언급하였고, 인도네시아는 MPA 확대 계획 및 어업인들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 의무 부여 노력 등을 소개하였다.

〈그림 3-1〉 2022년 제2차 유엔 고위급 해양회의



자료: IISD 홈페이지(2022.7.22.)(검색일: 2022.7.30.)

프랑스는 해양오염 대응·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친환경 선박 개발·IUU 어업 근절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랑스 브레스트에서 개최된 One Ocean Summit에 이어 프랑스가 코스타리카와 함께 2025년 제3차 유엔 해양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공식적으로 개최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피지 등 태평양 도서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EEZ 경계선은 변동없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 중단을 요청하였다. 또한, 키리바시는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어업이 불법어업(IUU)으로 이어졌음을 언급하고, 불법어업은 키리바시가 해결하기에 너무 큰 문제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끝으로, 모리셔스는 인도양 수역 차고스 군도를 포함한 모리셔스 영토의

완전한 탈식민지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영국은 모리셔스가 차고스 군도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한 적이 없고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강조하며 모리셔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 3. 정책적 시사점

제2차 유엔 해양컨퍼런스는 유엔 SDG 14번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유엔 SDG 14번 목표 달성을 위해 ① 해양오염 대응, ② 해양 및 연안 생태계 관리, 보호, 보존, 재건(SDGs 목표 14.2, 14.5와 연관), ③ 해양 산성화 대응 및 최소화(SDGs 목표 14.3와 연관) ④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SDG 14.4, 14.6와 연관), ⑤ SIDS와 LDCs에 대한 경제적 혜택 강화 및 영세어업자에게 해양자원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공(SDG 14.7, 14.b와 연관), ⑥ 과학적 지식 증진과 연구역량 및 해양기술이전 강화(SDG 14.a와 연관), ⑦ 유엔해양법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 이행을 통한 해양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증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과 군사력 철수를 요청하는 다수 국가의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전 회의와 차이가 있었다. 제2차 유엔 해양컨퍼런스에서는 해수면 상승 및 연안침식 등 기후변화 대응, 해양산성화 대응 및 해양생물다양성 영향 최소화,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0% 지정,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IUU 근절 및 지속가능한 어업 촉진, 다자간 및 지역해 협약,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해양과 해양자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포괄적·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차 유엔해양컨퍼런스 결과는 향후 국내 해양환경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강화해야 하는 세부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

## 제2절 유엔 BBNJ 정부간회의

---

### 1. 제1차-제4차 정부간회의 개관

유엔 BBNJ 논의는 2004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비공식 실무작업반 회의’를 설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작업반회의에서 저층트롤어업, 해양과 학조사 등 인간활동이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요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논의가 발전함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에 있어 해양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작업반회의가 총 9차례 개최되었으며, 그 중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새로운 국제문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준비위원회에서 4대 핵심쟁점과 국제문서의 형태, 유엔해양법협약 등 기존규범과의 조화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3월 제1차 유엔 BBNJ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4차 준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요 쟁점과 쟁점별 국가의 입장이 공유되었다. 이후 2018년부터 문안 협상을 위한 정부간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간회의는 2011년 합의된 패키지 협상(package deal) 결정에 따라 해양유전자원, 구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으로 의제를 구분하여 쟁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유엔 BBNJ 정부간회의를 통해 성안 작업이 진행 중인 유엔 BBNJ 국제문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인 공해와 심해저를 지리적 범위로 한다. 북극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에 해당하는 ‘중앙 북극 공해’ 역시 공해의 일부로서 유엔 BBNJ 국제문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sup>50)</sup>

---

50) 박수진외(2020), p. 11.



〈그림 3-2〉 제4차 유엔 BBNJ 정부간회의



자료: (좌) IISD 홈페이지(2022.3.7.)(검색일: 2022.8.20.), (우) IISD 홈페이지(2022.3.8.)(검색일: 2022.8.20.)

〈그림 3-3〉 제5차 유엔 BBNJ 정부간회의



자료: IISD 홈페이지(2022.8.15.)(검색일: 2022.9.20.)

한편, 제4차 정부간회의는 비공식, 소규모 협의(informal-informals)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실질적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엔BBNJ 국제 문서 성안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대립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용어정의, 이익공유 의무화, 구역기반관리수단 관련 여타 국제법문서 및 기구와의 관계, 의사결정 방식,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지속되었다.

---

## 2. 현안 및 쟁점

### 1) 일반조항

#### (1) 전문 및 명칭

제4차 정부간회의 이후,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UN선언을 재확인하고,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현존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언과 이 협약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해양 관리체제(ocean stewards)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문언이 협정 전문에 포함되었다.<sup>51)</sup>

원주민의 권리에 관하여, 제5차 정부간 회의에서는 해당 문언에 전통 지식의 중요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52)</sup>

한편, BBNJ 국제문서는 의장문서에서 BBNJ 협정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어 향후 심해저이행협정, 유엔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유엔해양법협약의 3번째 이행협정 형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까지 정식명칭은 합의되지 않았다.

#### (2) 목적 및 협약의 적용범위 등

대다수 국가가 이 협의 목적 조항에 유엔 BBNJ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을 포함하는데 찬성하였으며, 제4차 정부간회의 이후 ‘현재와 장기적 관점에서’라는 문언이 추가되었다.<sup>53)</sup> 전문에서 BBNJ의 보존과 이용에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개념이 포함된 바와 같이 BBNJ 체제의 형성에 있어 전지구적·거시적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

51) UNGA(2022), PREAMBLE

52)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p. 3.

53) UNGA(2022), Article 2

한편, 유엔 BBNJ 국제문서 초안에서는 협정의 적용범위를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ABNJ)’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가 이 규정을 지지하고 있으나,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는 ABNJ의 범위에 심해저(deep seabed)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54)</sup>

유엔 BBNJ 국제문서의 적용범위는 다른 국제기구·지역기구 체제와도 관련된다. 제4차 정부간회의에서 이 협정이 현존하는 다른 국제적·지역적 체제(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이하 IFBs)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에서 ‘현존하는’을 삭제하는데 동의함으로써 국제기구, 지역기구, 분야별 기구 등의 관리범위가 잠정적으로 확대되었다.<sup>55)</sup>

### (3) 일반원칙 및 접근법

유엔 BBNJ 국제문서의 적용과 해석의 일반원칙 및 접근법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과 ‘소규모 도서 국가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의 개념이 새로이 논의되었다. 이외에 ‘인류공동유산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에 대해서는 국가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사전예방’의 개념에 관해서는 사전예방의 적용, 사전예방적 원칙, 사전예방적 접근법 등의 용어가 논의되었으며, 이는 국제환경법에서 발전한 사전예방의 개념이 일반적 원칙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54)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p. 3.

55) UNGA(2022b), UNGA(2022c)

---

## 2) 해양유전자원

### (1) 용어정의

용어정의에 관한 논의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현지내(*in situ*), 현지외(*ex situ*)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접근’을 정의하고자 하였으나, 제4차 정부간회의에서 현지 외 접근을 정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제5차 정부간회의 문안에서는 현지외 접근을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바이오기술, 현지내 수집, 파생물과 해양유전자원(MGRs)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MGR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모든 물질을 포함하는 방식과 유전물질에 한하여 정의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sup>56)</sup>

### (2) 적용범위 및 관련 활동

해양유전자원에 관련한 규정의 공간적, 시간적, 물적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적용범위를 협정 발효 이후 ABNJ 현지내에서 수집된 해양유전자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지외 접근의 경우에도 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sup>57)</sup> 한편, 어족자원이나 기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생물자원, 다른 국제법에 따라 관리되는 어업 활동에 대해서는 이 협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sup>58)</sup>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한편 유엔 BBNJ 국제문서는 해양유전자원 관련 활동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국가 관할권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ABNJ의 유전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권

---

56)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p. 4.

57) Ibid, p. 4.

58) UNGA(2022), Article 8

리를 규정한 문언과 MGRs을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무에 관한 문언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9)</sup>

### (3) 이익공유

이익공유에 관한 규정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이다.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이익공유에 관한 제안된 첫 번째 안은 현지내 수집된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안은 현지내 수집된 해양유전자원과 현지의 수집 자원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공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60)</sup>

또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전문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과학기술기구와는 별개의 기구로서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관리감독하는 기구이며, ABS 전문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sup>61)</sup>

## 3) 구역기반관리수단

### (1) 용어정의 및 목적

‘구역기반관리수단’의 기본 개념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분야나 활동이 관리되는 특정 공간에 적용되는 수단이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과 구역기반관리수단의 개념에 차등을 주는 지 여부에 따라 국가간 이견이 존재한다. 해양보호구역은 보존조치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고, 구역기반관리수단은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의견이 있으며, 반대로 해양보호구역과 구역기반관리수단 사이의 개념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

59)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p. 4.

60) Ibid, p. 4.

61) Ibid, p. 4.

---

는 의견이 있다.<sup>62)</sup>

한편, 구역기반관리수단의 목적으로 BBNJ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통합적, 다분야적 접근의 증진, 구역기반관리수단의 포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호조치의 적용, 사회경제적·문화적 가치의 증진, 과학지식의 증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 등이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sup>63)</sup> 다만,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를 주요 목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sup>64)</sup>

## (2) 구역확인 및 결정

협정 문안 제17조는 구역기반 관리수단을 제안할 때 포함해야하는 핵심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공간적 범위,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정보, 해당 지역의 활동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 및 생물다양성 현황,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목표, 관리계획 수립 시 우선 고려사항이 핵심요소에 해당한다.<sup>65)</sup> 구역기반 관리수단의 제안 시 핵심요소에 관하여,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과학지식 및 전통지식에 관한 레퍼런스를 포함하고,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 해저케이블 현황을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sup>66)</sup>

다수 국가들이 구역기반 관리수단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 협정의 당사국총회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총회와 다른 IFBs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IFBs가 없는 곳에 한하여 당사국총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견과 IFBs가 존

---

62)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p. 5

63) UNGA(2022) Article 14; UNGA(2019) Article 14

64)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p. 5

65) UNGA(2022), Article 17

66)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p. 5

재하는 경우, 당사국총회는 해당 IFBs에 권고적 의견적 제시할 수 있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sup>67)</sup>

### (3) 이행 및 모니터링·평가

협정 문안에는 구역기반 관리수단의 이행에 관한 국가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 협약에 따른 구역기반 관리수단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8)</sup> 또한, 구역기반 관리수단의 이행이 소도서 개발도상국에게 과도한(disproportionate) 부담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다.<sup>69)</sup>

협정 문안에서 구역기반 관리수단의 이행은 당사국총회 보고 체계 통해 이루어지고, 과학기술기구가 이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점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구에 모니터링·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의견을 제시 및 공표하는 역할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sup>70)</sup>

## 4) 환경영향평가

### (1) 용어정의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 부문에서는 ‘누적 영향’에 관하여 2개 안에 대하여 국가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제1안은 당사국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관할권 이원 해역에 누적적 영향을 주는 경우를 포함하

67) Ibid, p. 6

68) UNGA(2022), Article 20

69)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p. 6

70) Ibid.

---

고 있으며, 제2안은 과거, 현재, 예상가능한 미래의 서로 다른 활동이 같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누적 영향을 개념적으로 정의한다.<sup>71)</sup>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용어정의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보건적 영향을 포함한 국가관할권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야기되는 영향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는 안과 당사국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서 ABNJ에서 이루어진 계획된 활동으로 야기되는 영향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는 안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며, 대다수의 국가가 양안의 절충안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sup>72)</sup>

BBNJ협정 문안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UNCLOS 환경영향평가 규정의 이행, 누적·초국경 영향에 대한 고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공, ABNJ에서 활동을 평가하는 체계의 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다.<sup>73)</sup> 대다수의 국가는 UNCLOS 이행 목적을 포함하는데 동의하고 있으나, 다른 사항에 관해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 (2) 환경영향평가 의무

관할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잠재적 영향 평가, 관련 입법적·정책적 조치 시행, 협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행 여부의 결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의무의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해당 의무 이행 규정을 강행적 규정으로 또는 재량적 규정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sup>74)</sup>

한편,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다른 관련 IFBs에서 환경영향평가 의무가

---

71) UNGA(2022) Article 1.8

72)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p. 6.

73) UNGA(2022), Article 21bis

74)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p. 7.



부여되는 경우에 협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수의 국가들이 IFBs의 환경영향평가와 협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동등한 수준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총회에서 IFBs와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sup>75)</sup>

### (3) 절차 및 의사결정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하는 요건에 관해서는 두가지 안이 논의되었다. 제1안의 경우 소규모, 일시적 영향을 야기하는 활동을 스크리닝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내용이며, 제2안은 중대한 오염이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활동에만 적용하자는 내용이다.<sup>76)</sup>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하여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국가들은 스크리닝, 스코핑, 영향 진단 및 점검, 경감, 예방, 잠재적 영향 관리 등의 요소를 포함하되, 문언을 간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개시 여부의 공표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은 공동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3국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에 한하여 공표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sup>77)</sup>

협정 문안 제38조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한 규정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개시에 관한 결정을 온전히 국가의 관할 사항으로 둘 것인지 또는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에 해당한다.

75) Ibid, p. 7.

76) Ibid, p. 7.

77) Ibid,

---

## 5)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 (1) 목적 및 국제협력

BBNJ협정 문안에서는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의 목적을 국가들의 해양 과학·기술역량의 강화와 BBNJ를 보존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데 관한 지식의 공유 강화 등을 정하고 있다.<sup>78)</sup> 이에 대하여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역량강화 등의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sup>79)</sup>

또한,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발 도상국에 대한 고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도움을 제공(assist)해야 한다.”는 문안에 합의하였다.<sup>80)</sup>

### (2) 유형

유엔 BBNJ 국제문서 문안 제46조에서는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에 대한 예시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 또는 지식, 데이터의 공유, 전통지식에 관한 지식 전파 및 인식 제고, 관련 인프라 및 인적자원 개발, 지침 공유 등이 예시적 유형에 해당한다.<sup>81)</sup>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예시적 규정을 문안에 포함하는데 찬성하였으며, 부속서를 통해 이와 같은 유형을 구체화하는데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존재하였다.<sup>82)</sup>

---

78) UNGA(2022), Article 42

79)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p. 7.

80) Ibid. p. 7

81) UNGA(2022), Article 45

82)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p. 7.

### (3) 모니터링·점검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에 대한 모니터링·점검에 관한 주요 쟁점은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관한 진단·평가, 재정지원에 대한 점검, 수행성과 평가, 장래 권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였으며, 해당 역할을 당사국총회에서 수행할지 또는 개별 위원회에서 수행할지에 관한 논의가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진행되었으며, 특정 당사국으로 구성된 개별 위원회에서 해당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중이다.<sup>83)</sup>

## 6) 조직구성

유엔 BBNJ 국제문서 성안에 따라 구성될 조직으로 당사국총회, 과학기술기구, 사무국 등이 있다.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당사국 총회가 잠정조치 또는 긴급조치의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대다수의 국가가 “당사국 총회에서 협약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사항에 동의 의견을 표현하였다.<sup>84)</sup> 한편, 한 지역 그룹에서 협정에 따른 사무국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대다수 국가는 UNDOALOS를 사무국으로 하는데 동의하였다.<sup>85)</sup>

## 3. 정책적 시사점

제4차 및 제5차 정부간회의를 거치면서 BBNJ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의 인식이 구체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대간의

83) Ibid. p. 8.

84) Ibid.

85) Ibid.

---

형평을 포함, 장기적 시각에서 ABNJ를 인식하고 있으며, 협정에서 구체화되는 관리수단들은 UNCLOS 규정의 이행에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유엔 BBNJ 국제문서에 따른 수단들은 IFBs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제5차 정부간회의에서 국가들은 대체로 IFBs의 역할을 강조하고 협정에 따른 관리체제를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협정이 채택된 이후에도 현존하는 또는 장래 설립될 IFBs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유지·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우리 정부의 대외적 전략 수립에 고려해야 할 주요 사안에 해당한다.

한편, 해양유전자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개도국가 선진국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그러나 이는 산업적 관점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는 산업적 이익과 국제적 책임의 조화를 추구함이 타당하다. 해양유전자원의 이용·활용은 높은 산업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적 도약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산업적 여건과 정책 여건을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구역기반 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국가간 이견이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나, 동 용어는 협정의 적용범위와 국가의무의 범위를 폭넓게 변화시키는 핵심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그 개념과 범위를 문언으로 명시함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유엔BBNJ 국제문서 성안협상 전략은 산업적 관점과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의 관점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적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량과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제사회 전반의 역량과 여건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BBNJ 협정이 실제 국제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절 생물다양성협약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 1. 개관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3대 리우협약이라고 일컬어진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에 발효되었으며 2022년 12월 기준으로 196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이다. 2018년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제14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적 생물다양성 목표인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목표(Aichi Biodiversity Strategic Targets)’을 대신할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설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디지털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해양·연안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제2차 업무계획’, ‘수분매개체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지속가능한 야생생물 관리’, ‘재원 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 협력’, ‘다른 협약 및 국제기구,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협약 및 부속 의정서 상 절차의 효과성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4차 당사국총회의 최대 쟁점사항은 디지털서열정보였다. 즉, 디지털서열정보의 용어정의,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여부, 이익공유방식 등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우리나라, EU,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선진국은 DSI는 나고야의정서의 대상이 아니며, 정의 및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

과 과학발전을 위해 DIS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의 보장을 강조하였다. 한편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은 DSI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대상이며, DSI의 이용으로부터 이익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DSI에 관한 논의는 향후 전문가회의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TA), GBF 관련 작업반회의 등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86)</sup>

한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2년 주기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15차 당사국총회는 2020년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제15차 당사국총회는 2년이 미뤄진 2022년 12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 2. 현안 및 쟁점

2022년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96개 당사국의 대표들과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2030년까지의 새로운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논의가 총회 기간 내내 치열하게 이어졌다.<sup>87)</sup> 이하에서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을 분석해보겠다.

---

86) CBD/COP/14/14

87) 환경부 보도자료(2022.12.20.)(검색일: 2022.12.22.)

## 1)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 (1) 목적 및 특징

당사국들은 2010년 제10차 나고야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아이치 전략 목표(2011-2020)’이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이행수단의 부족과 사회 전 분야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한계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새로운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채택하였다.<sup>88)</sup>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는 새로운 전략계획은 스마트(SMART) 원칙<sup>89)</sup>에 부합하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기로 제14차 총회(2018)에서 합의했고, 4년간의 논의(2019~2022)를 거쳐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다.<sup>90)</sup>

### (2) 구성 및 목표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프레임워크에는 2050년까지의 목표(Goals, 4개),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Targets, 23개), 이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①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 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②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③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④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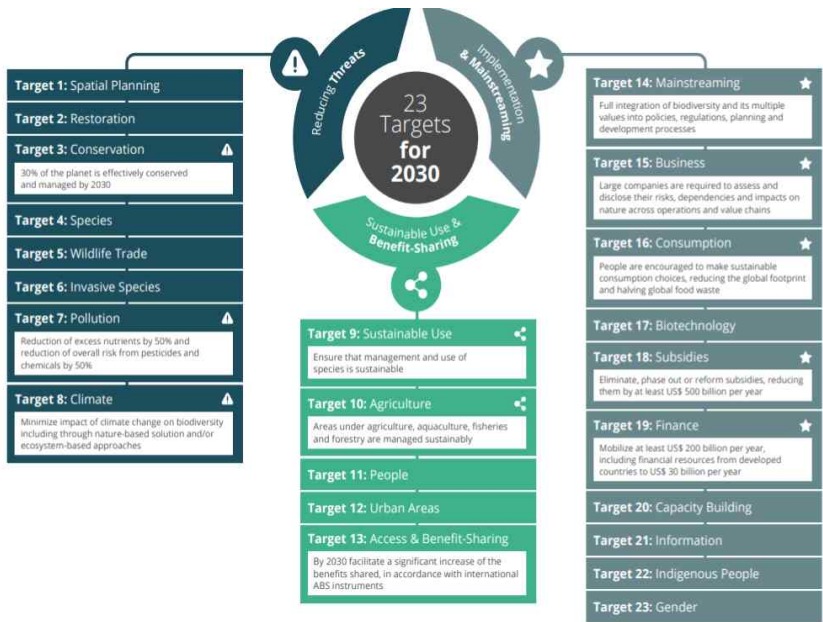
88) 기존에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라는 명칭으로 논의되던 프레임워크를 제15차 당사국총회의 당초 개최지인 중국 쿤밍(코로나19 상황으로 변경)과 실제 개최지인 캐나다 몬트리올의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89) ‘스마트(SMART) 원칙’은 구체적(Specific), 측정가능한(Measurable), 달성가능한(Achievable), 결과 지향적(Result-based), 시간이 제한된(Time-bound)을 의미한다.

90) 구경아(2022),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의 자세한 세부 내용은 CBD/COP/DEC/15/4 참조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아울러, 생물 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①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②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③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 19도 포함되었다.<sup>91)</sup>

〈그림 3-4〉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체계



자료: Business for Nature 홈페이지(검색일: 2022.12.20.)

91) 환경부 보도자료(2022.12.20.),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5) 마무리, pp. 11-14.



## 2) 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서열정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학 및 연구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유전자원정보<sup>92)</sup>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디지털서열정보의 개념 및 범위, 이익공유 방법 및 절차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선진국과, 디지털서열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초점을 두고 조속한 해법 마련을 요구하는 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쟁점 타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결정문에는 ① 디지털서열정보의 개념과 이익공유방안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② 임시 작업반을 설립하여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16차 총회까지 개발하는 것과, ③ 다자이익공유체계의 효과성을 제18차 총회까지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 3)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당사국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역량강화 및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비공식 과학기술협력 자문그룹을 설립하여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제협력 및 기업참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별 과학기술협력 지원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센터 설립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인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BI: Biological Bridge Initiative)’의 강화를 통해 임시로 이행하는 내용이 총회 결과에 반영되었다.<sup>93)</sup>

92) 유전자원정보는 디지털서열정보를 임시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적용범위 및 이익공유 여부 등과 연계되어 용어 자체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93) 환경부 보도자료(2022.12.20.),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5) 마무리, pp. 11-14, CBD/COP/DEC/15/4

---

#### 4) 자원동원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 방안’과 관련해서는 장·단기 자원 동원 전략을 수립했고, 지구환경금융(GEF)의 개혁을 통해 생물다양성 자금 흐름 제공을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및 생물다양성 관련 국가 재원정보와 국제적 기여를 밝히는 국가재정계획의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또한, 프레임워크의 내용과 연계되어 2030년까지의 재원조성 및 유해보조금 감소, 개도국으로의 국제 자금흐름 증대 등 실천목표 이행을 위한 자원동원의 장·단기 전략도 반영되었다. 특히, 향후 2년간(2023~2024) 단기 전략에는 2030년까지 지구환경금융 내에 생물다양성을 전담하는 신구기금(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Fund)을 만들고,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자금흐름의 규명 및 근절, 생물다양성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국내·공공·민간 등 모든 분야의 재원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총회 결정문에 포함되었다.<sup>94)</sup>

#### 5) 이행, 보고 및 검토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국가별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GBF)의 이행 경과를 전 지구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또한, 당사국들이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갱신하여 16차 총회까지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2026년 2월과 2029년 6월에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특히,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국가보고서 작성에 모든 당사국이 통일된 지표인 ‘핵심지표(Headline Indicators)’와 이를 보완하는 보조지표를 사용하여 이행상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sup>95)</sup>

---

94) 위의 자료

95) 위의 자료

## 6) 해양·연안 생물다양성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에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은 합의문 도출에 성공하였다. 한편, 총회 결정문에 유엔 BBNJ 논의에 참여하는 회원국에게 GBF가 고려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과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을 시작하기 이전에 회원국들에게 심해저 환경에 대한 과학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거나 국제해저기구 체제에서 심해저광물자원 개발로 인한 영향 통제 수단을 갖추도록 격려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또한 당사국들에게 해양·연안·섬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정책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제16차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 7) 기타 현안 및 쟁점

### (1) 생물다양성과 보건

‘생물다양성과 보건’ 의제에서는 각 당사국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용, ② 하나의 건강 접근법(One Health Approach)의 도입, ③ 생물다양성과 보건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 등을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 (2)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의제에서는 기후변화 저감·적응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과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등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BDR)’의 적용 등에 대해 합의가 어려워 추가 논의를 제16차 총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3) 합성생물학

‘합성생물학’ 의제에서는 합성생물학 관련 잠재적 영향에 대한 탐색·검토·평가를 위한 특별기술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해당 그룹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제16차 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림 3-5〉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자료: IISD 홈페이지(2022.12.19.)(검색일: 2022.12.22.)

## 3. 정책적 시사점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쟁점사항이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논의가 진행되었고, 제15차 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2050 비전과 “인류와 지구를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자연을 회복의 길로 되돌려 놓는다.”는 2030 미션은 향후 국제사회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4대 2050 목표, 23개 실천목표로 구성된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촉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절차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은 보전만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사회경제활동의 근간이

된다는 모든 주체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특히, 실천목표3에 따라 육지와 담수에 동일하게 해양 및 연안지역(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의 최소 30%가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OECMs) 관리체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해양이용·개발방식을 탈피하여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정책개발·추진과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천목표 8은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 및 생태계기반 접근을 통한 기후변화 및 해양산성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것이다. 즉, 자연기반해법 또는 생태계기반접근을 포함한 저감, 적응, 재해위험 감소행동을 통해 기후변화 및 해양산성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양환경-기후정책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동시에 실천목표 18과 관련된 유해한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제거하고 단계적으로 폐지·개혁해야 한다. 이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긍정적인 인센티브, 예를 들면 (가칭)‘탄소중립·친환경 보조금’ 등 경제적 유인제도를 개발·확대해 나가야 한다.



## 04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규제

### 제1절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

#### 1. 개요

##### 1) 기후변화 대응 체제 형성과정

기후 위기는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지구적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기후 위기 문제의 중요성은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의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1979년 세계기상기구(WMO), 유엔환경계획(UNEP) 및 국제과학연맹이사회(ICSU)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차 세계기후회의에서 세계기후계획 설치 결정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빌라크회의(1985)에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가능성이 상승함에 따라 국제적 대응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되었으며, 이후 1988년 토론토 회의에서는 200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1990년 기준) 감축목표 및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발족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

기술적 연구 및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제45차 유엔총회(1990)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의 설치를 의결하였으며, 국제사회는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전 인류의 공통된 문제이기에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sup>96)</sup>을 채택하였으며 1994년 3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발효 후, 매년 협약당사국들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y, COP)를 개최하여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으며 2021년 제26회 COP회의는 영국 글라스코에서 개최되었다. 기후변화 체제는 다자조약과 국제회의로 결정됐으며, 특히 UNFCCC 체결의 기점으로 체제의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보인다. 국제 기후변화체제를 보여주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파리 기후협약(Paris Agreement) 모두 당사국 총회를 통해 채택되었다.

## 2)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과 의정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세부 조항(Annex I)을 교토의정서에서 정하도록 결정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배출량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와 구체적인 감축량 등을 규정하여

---

96) 유엔기후변화협약은 26개의 조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형평성'(Equity),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과 '개별국가의 능력'(Respective Capabilities)을 고려하여 대응한다는 원칙을 적용



제1차 공약 기간(2008년~2012년) 동안 지정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비하여 평균 5.2% 감축하기로 결정, 2005년 2월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BDR)’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상 국가와 각기 다른 감축 목표를 배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하향식(Top-down)의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다. 해당 의정서의 주요 특징으로 목표 불이행시 징병적 조치, 1,2차의 기간 설정, 선진국 위주로 대상국가 선정 등이 있다. 하지만 CBDR 원칙이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서 제1차 기간(2008~2012) 종료 이후 일부 감축 대상국가들이 탈퇴, 또는 참여를 거부하여 교토의정서 기간이 완료되는 2020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교토의정서 기간 만료 후 신기후 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 2015)이 채택되었다. 해당 협약은 인류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를 설정하는 것에 당사국들이 합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파리협약의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 이하로 유지하며,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유엔이 감축목표를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상향식(Bottom-up) 운영방안을 채택하였다.

### 3) 제26차 당사국총회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각국 정부 대표 및 민간 부문 참여자들이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

---

을 발표하였다.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글래스고 기후합의 (Glasgow Climate Impact)’를 도출한 것이다. 글래스고 기후합의의 주 내용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지원 강화,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추가적인 상향,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의 축소, 기후 재원 확대 등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sup>97)</sup> 특히 메탄과 같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의 점진적 폐지와 신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지속가능한 산림 및 토지이용, 무공해차로의 전환 등에 관한 각국 정상들의 선언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up>98)</sup>

더불어 수년간 미합의 상태였던 파리협정 제6조에 근간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세부 이행지침이 도출은 제26차 회의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과거 교토의정서에서 시행된 교토메커니즘과 유사한 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한 발전 메커니즘, 비시장 접근법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은 계속되었고,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협력적 접근법 이행을 위한 지침,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의 관련 규칙, 방법, 절차를 위한 지침 등 탄소 시장 관련 지침이 최종합의되었다. 이로써 2015년 합의한 파리 기후협정의 세부 이행 규칙이 모두 완성되었다.<sup>99)</sup>

또한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1.5.℃ 목표 실현을 위하여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우리나라와 호주 등이 발표하였으며,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였다. 특히, 2030년까지 메탄 30%를 감축하는 국제연대인 ‘글로벌 메탄서약’ 등이 출범하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등

---

97) UNFCCC(2021)(검색일: 2022.12.12.)

98) 대외경제연구원(2021), pp. 3-4.

99) 위의 책(2021), p. 5.

을 평가하기 위한 ‘전지구적 적응목표(GGA: Global Goal of Adaptation)’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 주관 하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가 일부 수용되어 기술, 재정 등 지원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재원 신설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였으며, 감축,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 재원 신설 여부는 별도 논의 기구인 ‘글래스고 대화(Glasgow Dialogue)’를 설치하여 2024년 6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sup>100)</sup>

## 2. 현안 및 쟁점

2022년 11월에 개최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12개 국가에서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였으며, 198개 당사국과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3만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제27차 당사국총회는 극한 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되었던 만큼,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최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sup>101)</sup>

제27차 당사국총회는 제17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제4차 파리협정

100) 환경부 공식 블로그(검색일: 2022.11.12.)

101) 외교부·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보도자료(2022.11.20.) (검색일: 2022.11.20.)

---

당사국회의, 제57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 제57차 이행부속기구 회의와 함께 개최되었다. 이하에서는 제27차 당사국총회의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및 정의로운 전환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가 ‘이행(implementation)’의 총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감축, 적응, 손실 및 피해,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 파리협정의 주요 요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참여와 행동을 촉구하는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을 채택하였다.<sup>102)</sup>

한편, 파리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 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제28차 당사국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각료급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2)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2023년부터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착수하여 2026년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대화체를 구성하여 부문별·주제별 감축방안과 기술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대화체에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전지구적 적응목표(GGA)’의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GlaSS)’을 통

---

102) 외교부·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보도자료(2022.11.20.)  
(검색일: 2022.11.20.), 김효은(2022).

해 GGA의 성격, 목표, 세부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sup>103)</sup>

### 3) 손실과 피해 대응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당사국총회의 정식의제로 채택되었다.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 등 손실과 피해 관련 재원의 확대와 녹색기후기금(GCF) 등 이미 존재하는 기구의 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별도의 재정기구(financial facility)의 신설을 주장하는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취약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을 별도로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청정에너지의 확대, 감축 작업프로그램의 운영방안 수립,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일부 기술지침 채택을 통해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기반을 강화하였다.<sup>104)</sup> 또한 선진국 10명, 개도국 14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를 설립하여 2023년까지 기금의 제도적 장치와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 지원체계의 상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sup>105)</sup>

103) 전지구적 적응의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지표 등의 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부(2022),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104) 외교부(2022),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105) 외교부·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보도자료(2022.11.20.)  
(검색일: 202211.20.)

---

#### 4) 국제탄소시장 기술지침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이 채택되었으며, 2022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의 일부가 채택되었다. 즉, 파리협정 제6.2조의 국가간 자발적 감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초기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 제6.2조 활동의 사후 검토를 위한 검토지침 등의 일부가 확정되었다. 또한 파리협정 제6.4조의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기존 청정개발 메커니즘(CDM) 사업기간이 최대 2025년 말까지로 확정하였으며, 20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실적 사용을 위한 서면 신청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5) 기술지원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개도국으로 기술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이행기구인 ‘기후기술 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의 공동업무계획(2023-2027)을 확정하였다. 또한, 개도국 기후기술 지원을 위한 8대 주요 분야로 디지털화,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건물 및 인프라, 기술로드맵, 국가혁신시스템, 기술 수요평가, 비즈니스와 산업이 선정되어 현행보다 명확한 분류체계 하에서 효과적인 국가간 기후기술 협력이 가능해졌다.<sup>106)</sup>

---

106) 위의 자료.

〈그림 4-1〉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자료: (좌) The Guardian(2022.11.5.)(검색일: 2022.11.20.), (우) Bylines scotland(2022.11.7.)(검색일: 2022.11.20.)

### 3. 정책적 시사점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글래스-샤름엘셰이크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전지구적 적응목표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국내 기후변화적응정책의 진전과 효과성,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녹색기후기금 등 기존 재원과 별도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별도로 신설한 기금의 운영체계와 재원 동원의 효과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향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블루카본 등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방법과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 제2절 IMO 온실가스 규제

---

### 1. 개요

IMO는 2018년 제7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IMO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초기전략(Initial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을 채택하였다.<sup>107)</sup> 이 초기전략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sup>108)</sup> 이 초기전략은 2023년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23년 이후 개정전략을 통해 IMO 정책을 개선할 계획이다.

초기전략은 선박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단기(2018~2023), 중기(2023~2030), 장기(2030 이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13개, 5개, 2개의 감축조치 후보를 정하고 있다. 단기조치 후보군에는 에너지효율 설계지수(EEDI)<sup>4)</sup>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선박에너지효율관리 계획서(SEEMP)<sup>5)</sup>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현존선 에너지 효율 향상, 선속 감속규제 등이 포함되며, 무탄소 기반 대체연료 개발, 온실가스 거래를 고려하는 시장기반조치(MBM) 등은 중·장기 후보군에 포함된다. IMO 초기전략 감축목표는 ① 신조선박의 EEDI(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단계적 강화, ② 운송일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08년 대비 최소 40% 감축, ③ 국제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 총량 '08년 대비 50% 이상 감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109)</sup>

---

107)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문제를 심의하며, 73/78 MARPOL 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IMO 오염예방대응 전문위원회(PPR: Pollution Protection and Response)는 73/78 MARPOL 협약 제2장,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제6 부속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선체부착생물 관리지침 등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7), pp. 18-19를 참고하여 작성.

108) IMO(2018), p. 1.



〈표 4-1〉 IMO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조치 후보군

구분	내용
단기(2018~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EDI 및 SEEMP 기반 에너지효율 개선</li> <li>• 신조/현존선의 에너지효율 지표 개발</li> <li>• 현존선 개선 프로그램 수립</li> <li>• 최적속도와 선박감속에 대한 분석 및 고려</li> <li>• 메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처리 방안</li> <li>•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개발</li> <li>• 지속적 기술협력 및 역량 강화</li> <li>•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항구 개발</li> <li>• 국제해사연구위원회(IMRB) 설립</li> <li>• First Mover에 대한 인센티브</li> <li>• 모든 종류의 연료에 대한 지침 개발</li> <li>• 국제사회에 대한 IMO 활동 홍보</li> <li>• 정책 수립 기반을 위한 추가 연구 고려</li> </ul>
중기(2023~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위한 이행프로그램 개발</li> <li>• 신조/현존선의 에너지효율 지표 개발</li> <li>• 신규/혁신적인 배출량 저감 메커니즘</li> <li>• 기술협력/역량강화 활동의 지속적 강화함</li> <li>• 모범 사례 공유를 위한 피드백 메커니즘 개발</li> </ul>
장기(203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탄소 및 탈화석 연료 개발</li> <li>• 신규/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개발</li> </ul>

자료: 박한선(2020), p. 31.

이후 조치 시행에 관련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 등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IMO는 제73차 MEPC 회의에서 ‘2023년 최종 전략의 채택을 위한 후속조치 프로그램(programme to follow up on the initial IMO strategy on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ships)’을 승인하였다.

109) ibid.

이와 같은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기후 변화 대응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산업을 규제하는 최초의 사례이다.<sup>110)</sup>

한편, 2022년 12월 12일~16일에 IMO 런던 본부에서 개최된 제79차 MEPC에서는 MARPOL협약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MARPOL협약 개정사항은 ① 북극해 항만수용시설계획의 개발을 위한 지침서의 개정, ② 해양플라스틱 저감 및 폐기물 관리요건의 강화된 이행보장, ③ 지중해 해역의 SOx 배출규제해역 지정에 관한 위치 및 이행시기, ④ 연료유 공급서 및 IMO 선박연료유 사용량 의무보고제(DC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Data Collection System)에 탄소집약도 저감을 위한 단기 조치 관련 보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sup>111)</sup>

〈그림 4-2〉 2022년 제79차 IMO MEPC



자료: (좌) Gcaptain(2022.12.14.)(검색일: 2022.12.20.), (우) Il nautilus(2022.12.18.)(검색일: 2022.12.20.)

110) 박한선외(2019), p. 1.

111) IMO(2022b) Annex 1, Annex 2.

또한 제79차 MEPC 제79차에서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MO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개정(revision of initial IMO GHG Strategy)’,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Development of Mid-term measures including technical and economic measures), 에너지 효율 규제 이행을 위한 선박탄소집약도 지수(EEDI), 에너지효율설계지수(CII)의 이행을 위한 통일적 해석, 화물량 데이터 기반 운송업무 정보 수집, 연료사용량 보고 데이터에 관한 의제가 다루졌다.<sup>112)</sup>

## 2. 현안 및 쟁점

### 1) 현존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XI)

2011년 7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규칙이 채택되고 `13년 1월 발효되면서 13년부터 신조선박들은 에너지효율설계지수(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EDI)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선박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년 11월 제75차 IMO MEPC에서 현존선 에너지효율 규제 및 EEDI 추가 감축을 승인하였다. 이듬해 `21년 제76차 MEPC에서 현존선 에너지효율 규제 지침이 채택됨에 따라 현존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EEXI) 및 탄소집약도지수(CII)의 적용을 예정하였다.

EEXI는 1톤의 화물을 1마일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기관 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해 계산하여 지수화한 값을 말하며,<sup>113)</sup> 이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 EEXI 목표는 `23.1.1.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일자 이후 첫 번째 선박

112) IMO 홈페이지(검색일: 2022.12.25.)

113)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2022a) p. 6.

---

검사일까지 EEXI 규제 충족 여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EXI 규제 기준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건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 평균값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는 약 20%, 2025년 이후부터는 약 30%의 감축률이 적용된다.<sup>114)</sup>

## 2) 탄소집약도지수(CII)

탄소집약도지수(Carbon Intensity Indicator, CII)는 1톤의 화물을 1마일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연료소요량, 이동거리 등 실제 운항 데이터를 계산하여 지수화한 값을 말한다.<sup>115)</sup> CII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 선박연료소모 데이터수집시스템(Data Collection System for Fuel Oil Consumption of Ships, DCS)와 함께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용되는 운항적 조치이다.

CII 규제는 5천톤 이상 선박에 한하여 적용되며, 1년간의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CII를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A~E)을 부여받게 된다. 3년 연속 D등급(다소 열위), 또는 1년 이상 E등급(열위) 결과를 받은 선박의 경우, 저속운항, 저탄소 연료 사용 등을 고려한 에너지효율 개선 계획(SEEMP)을 수립하여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계획의 내용을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을 득하기 전까지는 운항이 제한된다.<sup>116)</sup>

또한 CII도 매년 규제 수준이 강화된다. 감축률은 2023년 5%, 2024년 7%, 2025년 9%, 2026년 11%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후 감축률은 차기 IMO 회의에서 결정된다.

---

114) TRADLINX(검색일: 2022.12.10.)

115)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2022a) p. 11.

116) TRADLINX(검색일: 2022.12.10.)

### 3) 전과정평가(LCA)

선박 연료의 전과정 온실가스/탄소집약도 지침서 개발은 초기전략 단기 조치 후보의 하나로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는 환경 영향 평가기법으로서 제품 또는 시스템의 전과정에 걸친 투입물과 배출물을 정량화하고 이와 관련한 잠재적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sup>117)</sup>

저탄소 또는 제로탄소 선박연료는 바이오연료, 수소연료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므로 탄소 배출 수준 및 환경에 대한 영향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sup>118)</sup> 따라서 통합적, 과학적 접근을 통해 가능한 큰 범위의 연료에 대한 전과정평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과정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제78차 MEPC에서 지침서 개발을 위한 통신작업반 설치가 승인되었으며, 제80차 MEPC에서 지침서 개발에 관한 최종 결과가 보고될 계획이다.<sup>119)</sup>

### 4)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중기조치는 선박 연료 자체에 대한 규제와 탄소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과 인센티브 제공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시장기반 조치(Market Based Measure)들로 구성된다. 제78차 MEPC에서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정조치의 결정 또는 채택은 없었으나 중기조치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로서 1)조치의 실행 가능성, 2)목표 달성의 효과성, 3)조치에 따른 회원국의 영향 고려로 제시되었다.<sup>120)</sup>

117)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2022b), p. 20.

118) IMO (검색일: 2022.12.10.)

119)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2022b), p. 22.

〈표 4-2〉 온실가스 감축 증기조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기술적 조치	온실가스 연료유 표준제도 (GFS)	• 연간 선박 연료 단위에너지당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국제해사지속가능성 기여금 및 보상금제도 (IMSF & R)	• CII 등급 기준, D, E 선박에 일정수준 기여금을 징수, 일부를 A, B 등급 선박에 지불하는 제도
경제적 조치	배출권 거래제 (ECTS)	• 배출총량을 설정하여 총량 내 선박별 배출권 할당, 이를 초과 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제도
	탄소 부담금 (GHG Levy)	• 화석연료 사용 선박에 연료유 대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징수
	ZEV 인센티브	• 기여금의 일부를 무탄소 연료 사용 선박에 지급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국제해사연구이사회	• 부담금을 탄소 기술 개발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
결합조치 <sup>121)</sup>	GFS + GHG LEVY	• 조치 이행 완화 등 개도국 지원금 마련을 위한 결합조치
	GFS + ECTS	

자료: 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022), p. 23.

### 3) 초기전략 개정논의

제78차 MEPC에서 초기전략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사국들은 IMO온실가스 목표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중국, 아르헨티나, UAE 등 개발도상국들은 감축 목표를 조정하기 전에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목표 채택에 따른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122)</sup>

제79차 MEPC에서 초기전략 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녹색항로(Green Corridor)’ 설정, 북극해와 주변에서 블랙카본을 대폭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전과정평가 방법 개선안에 관한 논의, 온실

120) 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022), p. 23

121) 기술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의 결합 등 여러 조치를 결합하는 형태를 말함

122) 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022), p. 23.

가스 감축 목표로서 선내 탄소 포집 기술 개념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sup>123)</sup> 결정사항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초기전략의 개정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제79차 회의에서 노르웨이, 국제해운위원회(World Shipping Council, WSC)와 함께 초기 전략 개정에 관한 의견을 IMP MEPC에 제출하였다.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확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료 전환'의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저탄소, 제로탄소 연료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 선박 연료 생산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sup>124)</sup>

이와 같은 전략의 변화를 위해서는 IMO 정책에서 '녹색항로(Green Corridor)'의 개념을 도입·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25)</sup> IMO에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IMO 내부에서 이니셔티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녹색항로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녹색항로 설정 기준에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4-3〉 녹색항로(Green Corridor) 기준(안)

구분	내용
1	• 공간적 범위 식별
2	• 항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탄소·제로탄소 연료 전환 식별
3	• 연료 이용가능성 명시
4	• 재정조치 및 인센티브 식별

자료: IMO(2022b), p. 4.

123) UKP&I(검색일: 2022.12.10.)

124) IMO(2020b), p. 2.

125) IMO(2020b), p. 3.

---

### 3. 정책적 시사점

우리 정부는 해운 분야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술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를 포함하는 규제성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MO는 기후변화 체제에서 해운 분야 대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제27차 UNFCCC 당사국 총회 등 최근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의 동향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해운 분야는 이와 같은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향후 해운분야 감축 요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EDI, EEXI, CII와 같은 조치의 적용방식은 더욱 고도화되고, 기술적 조치의 미래 적용에 관한 논의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과학적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우리의 해운산업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발굴·개발하기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최종적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기반 조치가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판단된다. IMO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시장기반조치의 적용을 위해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제로연합(Getting to Zero Coalition), 세계 항만 기후행동 프로그램(WPCAP) 등 민간분야에서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시장기반 조치의 시급한 적용과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분야 협력이 필수적이다. 민간분야의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장기반 조치는 산업·경제체제의 혁신적 전환이 요구되므로 이를 기회로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절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회의

### 1. 개요 : 회의체 목적 및 기능 등

‘유엔 해양 및 해양법 비공식협의(UN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유엔 ICP 회의)’는 1999년 4월 제7차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가 ‘해양과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 논의를 위한 별도 비공식협의회 구성을 권고함에 따라 ‘제54차 유엔총회 결의(54/33)’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유엔 ICP 회의는 2000년 이후 매년 해양 및 해양법 주요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유엔 ICP 회의 논의 주제는 향후 해양법과 관련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주제로 각국 정부 대표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유엔 ICP회의는 해양법과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즉, 해수면 상승과 그 영향(Sea-level rise and its impacts)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하부주제로 ① 해수면 상승, 이의 영향 및 관련 도전 이해 (Sea level rise : understanding the issue, its impacts and related challenges), ② 해수면 상승 관련 영향과 도전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및 조정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addressing the impacts and challenges related to sea level rise)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의제는 <표 4-4>와 같다.

〈표 4-4〉 2021년 유엔 ICP 세부 의제

1	개회 (Opening of the twenty first meeting)
2	• 의제 채택 (Adoption of the agenda)
3	• 일반적 의견교환 (General exchange of views)
패 널 토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면 상승과 그 영향(Sea-level rise and its impa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면 상승, 이의 영향 및 관련 도전 이해 (Sea level rise : understanding the issue, its impacts and related challenges)</li> <li>- 해수면 상승 관련 영향과 도전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및 조정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addressing the impacts and challenges related to sea level rise)</li> </ul> </li> </ul>
4	• 기구간 협력과 조정 (Inter-agency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회 작업을 위한 주제 및 패널 토론자 선택 절차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topics and panelists so as to facilitate the work of the General Assembly)</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과 해양법에 관한 향후 총회 작업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안 (Issues that could benefit from attention in the future work of the General Assembly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li> </ul>
7	• 회의 결과 검토 (Consideration of the outcome of the meeting)

자료: 유엔 ICP 홈페이지(검색일 : 2022.11.20.)

## 2. 현안 및 쟁점

2021년 유엔 ICP 회의는 공동의장인 이자벨라 피코 (모나코)와 빌리아미 바인가 톤(통가)의 진행과 패널리스트의 발표, 국가 정부 대표의 질의응답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주요 패널리스트들의 핵심적인 발표와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해수면 상승, 이의 영향 및 관련 도전에 대한 이해

1993년 기준 향후 100년간 해수면이 총 18cm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해수면 상승에 따라 침수나 범람, 수질오염, 연안 침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르면 저지대 연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 세계 1억 명의 인구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가 대표들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적응(adaptation) 정책과 남극 관측을 통한 변화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126)</sup>

제21차 ICP 회의에서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취약점과 이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응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인도네시아의 블루카본 아젠다(Blue carbon Agenda)를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마트라 광업지역을 맹그로브 숲으로 교체하는 등 맹그로브 숲(mangrove park)이나 산호초를 조성한 바 있다.<sup>127)</sup> 투발루 또한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이다. 투발루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하며, 이주 문제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른 무국적(statelessness)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바, 국제 사회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이주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sup>128)</sup>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무국적 문제는 다자적 및 지역적 차원의 문제이다. 무국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난민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완전히 가라앉는 경우 국제난민법에 따라 어떻게 무국적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sup>129)</sup>

## 2) 해수면 상승 관련 영향과 도전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및 조정

해수면 상승 문제는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인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126) Carlos Garcia-Soto (2021.6.14.)

127) UNGA (2021), para.33

128) UNGA (2021), para.36

129) UNGA (2021), para.36

---

위한 개별 국가 내 커뮤니티와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sup>130)</sup>

이에 태평양 도서국은 많은 해양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미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체득하였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해수면 상승 문제를 태평양 지역이 함께 대응해야 하며, 법적 측면에서 다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sup>131)</sup>

해수면 상승과 관련하여 남극 문제는 캐나다와 연관성이 높다. 남극은 많은 해수량을 지니고 있으며, 남극 해수와 관련한 연구프로그램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국제기구, 연구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sup>132)</sup> 현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수면 상승과 범람으로 인한 해양경계 변경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경계 변경 문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이며, 국제사회는 국가의 실행과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sup>133)</sup>

더불어 해수면 상승 문제는 「196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2조에 따른 “사정의 근본적 변경”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 있다고 보았다. 해수면 상승은 “근본적인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경계합의의 일방적 종료 및 철회를 허용하는지 여부, EEZ가 공해가 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EEZ와 대륙붕 권원이 될 수 있는 섬(islands)이 암석(rocks)이 되어 관할수역을 잃게 되는 경우의 문제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sup>134)</sup>

---

130) 위의 자료

131) Filimon Manoni (2021.6.16.)

132) Thomas James (2021.6.16.)

133) Snjolaug Arnadottir, (2021.6.16.)

134) Nilufer Oral (2021.6.18.)

### 3. 정책적 시사점

연안 도시에서의 해수면 상승은 연안 침식 및 침수 등 기후변화 리스크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안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또한 해수면 상승 문제는 「1969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2조에 따른 ‘사정의 근본적 변경’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 있는데, 해수면 상승은 ‘근본적인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경계합의의 일방적 종료 및 철회를 허용하는지 여부, EEZ가 공해가 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EEZ와 대륙붕 권원이 될 수 있는 섬(islands)이 암석(rocks) 되었을 경우에 관할수역을 잃게 되는 경우의 이슈도 국제법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을 위한 적응적 조치와 해양생태계 회복, 해양경제 활성화(blue economic wave)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05

### 정책방향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

1869년 최초의 플라스틱 ‘셀룰로이드’가 탄생하고, 뒤퐁사가 1938년 나일론을 합성하여 스타킹을 만들면서부터 플라스틱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현 세대는 플라스틱 시대로 일컬어질 정도로 플라스틱의 편리함과 유용성은 엄청났으나, 1분마다 10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이 구매되고 매년 최대 5조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매년 4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sup>135)</sup>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 3,400만 톤에서 2019년 4억 6,000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억 5,600만 톤에서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조치로 202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고 재활용되지 않은 폐플라스틱은 매립, 무단투기, 소각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sup>136)</sup>

---

135) 조유미(2022), p. 226.

136) 이성희(2022), p. 3.

---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의 성안을 위한 협상이 2023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제5차 정부간협상 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부문별 대응전략과 문안 협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향후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비전과 목표, 실천목표인 동시에 국가별 이행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위기요인, 전망 분석을 통해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세부 실천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가칭)‘K-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양오염, 외래종, 해양산성화 등 우리나라 해양을 위협하고 있거나 해양보호구역, 복원, 자원 마련 등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단계별 목표와 제도 정비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엔 BBNJ 국제문서는 기존 국제조약에서 충분히 규율되지 않은 심해저와 공해의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해수온 상승, 해양산성화, 해양오염, 남획 등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유엔 BBNJ 국제문서를 통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하고 있다.<sup>137)</sup>

2023년 2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5차 유엔 BBNJ 속개 정부간회의’에서 유엔 BBNJ 국제문서가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후위기, 탈(脫) 플라스틱, 유엔 SDG 14번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 해양컨퍼런스의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그것

---

137) Anika Havaladar & Charlott Verdon(2023), p. 1.



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공해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내에서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복원뿐만 아니라, 공해 및 심해저에서의 해운, 수산, 파이프라인 및 해저케이블 설치 등 해양활동은 ‘보전’과 ‘지속가능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새로운 글로벌 해양환경규제 패러다임 변화가 속도감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IMO의 온실가스 규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은 적응정책, 손실과 피해에 대한 대응 등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IMO 규제와는 차별화되며, IMO는 기술개발 및 산업적 적응성을 고려한 기술규제라는 점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에 비해 구체성과 실용성이 높은 규제이다.

〈표 5-1〉 주요 글로벌 해양환경규제

구분	주요내용	채택(예정) 시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의 대응과 전 생애 주기 관리를 한 국제협약</li> <li>2024년 협약 성안을 목표로 정부간협상 위원회 진행 중</li> </ul>	2024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년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목표(2011~2020)를 대체할 2030년까지의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목표</li> <li>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캐나다, 몬트리올)</li> </ul>	2022.12.
유엔 BBNJ 국제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임시 작업 반회의 설치</li> <li>2015년 제9차 작업반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BBNJ 국제문서를 성안하기로 합의하면서 4차례 준비위원회 (2018~2019), 5차례 정부간회의(2019~2022)가 진행</li> <li>2023.2~3. 제5차 속개 정부간회의가 개최될 예정</li> </ul>	2023

구분	주요내용	채택(예정) 시기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파리협정의 9개 분야 17개 이행규칙 중 8개 분야 16개 규칙에 합의</li> <li>• 2021년 제26차 글래스고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지침’의 채택으로 이행규칙 완성</li> </ul>	2021.11.
IMO 온실가스 감축 단기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온실가스 감축 단기조치인 에너지효율등급지수(EEXI), 선박탄소집약지수(CII) 채택</li> </ul>	2021.6.

자료: 저자 작성

## 제2절 정책제언 및 후속과제

2015년 9월에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2016-2030)’의 14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이용’은 2030년까지 인류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특히, 14번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는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 불법어업, 해양쓰레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가간·지역간·글로벌 협력과 각국의 적극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sup>138)</sup>

플라스틱 오염은 기후위기와 더불어 인류가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로서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이 2024년 성안된다면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소비-폐기-재활용과 관련된 모든 주체와 산업은 새로운 규제와 순환경제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사용원료, 분해조건, 사용목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sup>139)</sup>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

138) 박수진 외(2020), p. 1.

거 및 선별 시스템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생산자책임재활용, 재생원료 의무사용 요건, ‘녹색공공 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등이 해양플라스틱 분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엔 BBNJ 제5차 속개 정부간회의가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서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해와 심해저에서의 새로운 국제해양질서를 형성하게 될 유엔 BBNJ 국제문서는 ‘유엔BBNJ 협정’이라는 명칭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에 유엔BBNJ 협정이 최종적으로 채택된다면 그동안 공해와 심해저에 해운, 원양산업, 대양연구 및 조사, 해저케이블 등의 기존 해양이용 활동과 공해 및 심해저에서의 다양한 해양에너지 연구개발, 해양플랜트, 해양자원 이용 및 조성 등 미래 해양이용 활동도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내 연구와 산업 등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해양과 연안에서의 이루어지는 해수면 및 해수온 상승, 해양산성화, 연안침식, 수산어종 변화 및 수산자원 고갈, 연안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 등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의 논의, 유엔 ICP에서 다뤄지고 있는 해양법과 해양관할권 이슈와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PEMSEA, COBSEA, YSLME 등 지역해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협력과 한미, 한중, 한일 등 양자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새로운 경제질서에서의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환경협력 분야와도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139) 위의 책, p. 13.

---

기후위기는 인류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며,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당사국총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기후 취약국에게 지원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IMO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기술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조선·해운업계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IMO의 MARPOL협약 및 부속서 개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연료사용량 데이터 보고 등 해운분야 탈탄소화 규제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2), 글로벌 이슈 브리프 2022년 12월 호.
- 구경아(2022), Post-2020 글로벌생물다양성체계 합의와 이행, 제3회 글로벌공해역 포럼 세미나 발표자료집.
- 김기현(2022),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약의 동향과 전망, 제3회 글로벌공해역포럼 세미나 발표자료집.
- 김민경·정서용(2020),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율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27권 제1호.
- 김효은(2022), 기후위기 시대 국제사회의 대응-샤름엘셰이크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 결과와 과제, 제3회 글로벌공해역포럼 세미나 발표자료집.
- 대외경제연구원(2021),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논의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21, No.21.
- 박수진 외(2017), 해양환경외교의 과제 및 대응방안 연구, 외교부.
- 박수진 외(2020), 글로벌 공해역 포럼 기반구축 사업-공해역의 주요 이슈 분석 및 포럼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수진(2022), 신 글로벌 공해역 질서의 형성과 해양의 역할, 제3회 글로벌공해역포럼 세미나 발표자료집.
- 박한선·하신영·박상원(2019),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KMI 동향분석 Vol. 13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한선·김보람·박상원·정인회(2020), IMO 온실가스 규제 대응 정책방향 연구, 기본 연구 2020-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형철,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CAOFA) QKFG 이후 경과와 전망, 제3회 글로벌공해역포럼 세미나 발표자료집.

안대한·김정인(2018),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정책, 환경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이성희(2022),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 5, No.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주관(2022), IPEF 의의와 전망 : 무역과 환경을 중심으로, 제3회 글로벌공해역포럼 세미나 발표자료집.

조유미(2022), 탈플라스틱 시대를 향한 최근 국제법적 논의와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제67권 제3호.

채여라(2020), 국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평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2017), 국제해사기구 환경안전규제 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2022), 해운부문 온실가스 이슈리포트, 제1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2022a), 선박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 및 친환경선박 보급정책, 2022 해양환경정책설명회 발표자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2022b),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LCA) 개요 및 국제해운 논의동향, 2022 해양환경정책설명회 발표자료.

해양수산부·UNEP·NOAA·해양환경공단(2022),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 추진 기본계획(안)'.

## 국외 문헌

- Anika Havaladar & Charlott Verdon(2023), AJIL Insights, Vol. 27 Issue. 2.
-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 Summary of the 5th Session of the IGC o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CLO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of ABNJ :15-26 August 2022. Vol. 25, No. 240.
-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a), "Summary of the first UN Environment Assembly of the UN Environment Programme: 23-27 JUNE 2014". Vol. 25, No. 240, 2022"
-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22b), "Summary of the second UN Environment Assembly of the UN Environment Programme: 23-27 May 2016". Vol. 16, No. 135, 2022"
-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17), "Summary of the third session of the UN Environment Assembly: 4-6 DECEMBER 2017". Vol. 16, No. 143, 2017"
- IISD Earth Negotiation Bulletin(2019), "Summary of the fourth session of the UN Environment Assembly: 11-15 March 2019". Vol. 16, No. 153, 2019"
- IMO(2018), Initial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Resolution MEPC.304(72).
- IMO(2022a),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 revision of the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submitted by Norway, Republic of Korea and WSC", MEPC79/7/17.
- IMO(2022b),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Proposed updates and amendments to resolution MEPC.323(74) and resolution MEPC.327(75)" MEPC/79/7/14, 2022b
- UN General Assembly(2022), "Further revised draft text of an agreement under the UNCLO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CONF.232/2022/5.
- UNGA (2021), A/76/171, Report on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at its twenty

---

-first meeting

UNGA(2022a), A/77/25,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Resumed fifth session(Nairobi, 28 February to 2 March 2022)

UNGA(2022b), A/COF.232/2022/L.3, Draf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New York, 7-18 March 2022)

UNGA(2022c), Further revised draft text of an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New York, 15-26 August 2022)

## 인터넷 자료

---

동아시아바다공동체 홈페이지, '제6차 해양쓰레기 국제 컨퍼런스 열려', <https://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6234>(검색일: 2022. 12. 26.)

동아시아바다공동체 홈페이지, 'OSeAN, 6IMDC에서 한국 해양쓰레기 정책 성과 소개', <https://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code=activity&idx=6233>(검색일: 2022. 12. 26.)

외교부 뉴포커스(2022.12.9.),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633](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633)(검색일: 2022.12.10.)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보도자료(2022.3.2.), '제5차 유엔환경총회 폐막,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마련 등 논의', [https://www.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67923](https://www.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67923)(검색일: 2022.10.2.)

외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공동보도자료(2022.12.3.),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만들기, 닛을 올리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097](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097)(검색일: 2022. 10. 2.)

외교부·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보도자료(2



- 022.11.20.),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폐막',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7508>(검색일: 2022.11.20.)
- 유엔환경회의 홈페이지, <https://www.unep.org/environmentassembly/>(검색일: 2022.11.30.)
- 유엔 해양컨퍼런스 홈페이지, 자발적 공약 등록 온라인 플랫폼, [https://sdgs.un.org/partnerships/action-networks/ocean-commitments?\\_gl=1\\*13ei5pj\\*\\_ga\\*MTQyNDQzNjYwMi4xNjgxNjYyMjEw\\*\\_ga\\_TK9BQL5X7Z\\*MTY5NjE2MzM1Ny40LjEuMTY5NjE2MzU0MC4wLjAuMA](https://sdgs.un.org/partnerships/action-networks/ocean-commitments?_gl=1*13ei5pj*_ga*MTQyNDQzNjYwMi4xNjgxNjYyMjEw*_ga_TK9BQL5X7Z*MTY5NjE2MzM1Ny40LjEuMTY5NjE2MzU0MC4wLjAuMA)(검색일: 2022.10.1.)
- 제7차 IMDC 홈페이지, <https://7imdc.org/general/about?lang=ko>(검색일: 2022. 12. 26.)
- 플라스틱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 홈페이지, 참여국 현황, <https://hactoendplasticpollution.org/become-member/>(검색일: 2022.12.15.)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3.3.), '해양폐기물 관련 유엔환경총회(UNEA) 국제협약 제정 논의 동향',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971&boardKey=10&articleKey=45178>(검색일: 2021.11.17.)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9.19.), '해양폐기물 분야 전 세계 전문가들 한자리에!',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7390&boardKey=10&menuKey=376&currentPageNo=1>, 2022.9.19.
-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홈페이지,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key=%ED%95%B4%EC%96%91%EC%93%B0%EB%A0%88%EA%B8%B0+%EB%B0%9C%EC%83%9D%EB%9F%89&idx=2507>(검색일: 2022. 12. 26.)
- 환경부 홈페이지(2017.12.6.), 제3차 유엔환경총회,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막,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5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MasterId=108&boardCategoryId=&boardId=828550&decorator=>(검색일: 2022. 12. 28.)
- 환경부 보도자료(2022.12.20.),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5) 마무리-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628>(검색일: 2022.12.22.)

- 
- KMI 내부자료, '국제회의 경험공유 워크숍' KOEM 김영남 박사 전문가 자문회의 발표 자료, 2022.12.12.
- IMO 홈페이지, "제79차 MEPC", <https://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Pages/MEPC-79th-session.aspx>(검색일: 2022.12.25.)
- 환경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sns/222570954017>(검색일: 2022.11.12.)
- 환경부 보도자료(2014.6.25.), '전세계 환경 문제 해결...제1차 유엔 환경총회 열려',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390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35389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decorator=>(검색일: 2022. 12. 26.)
- 환경부 보도자료(2016.5.30.), '제2차 유엔 환경총회, 지속가능발전 환경분야 이행 촉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213>(검색일: 2022. 8. 28.)
- 환경부 보도자료(2019.3.16.),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4차 유엔 환경총회 폐막',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789>(검색일: 2022.7.1.)
- 환경부 보도자료(2022.5.19.), '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923>(검색일: 2022. 10. 3.)
- 환경부 보도자료(2022.12.20.),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5) 마무리, Business for Nature 홈페이지, <https://www.businessfornature.org/cbd-cop15>(검색일: 2022.12.20.)
- Bylines scotland(2022.11.7.), COP27 and the inconvenient truth, <https://bylines.scot/environment/climate-change/cop27-and-the-inconvenient-truth/>(검색일: 2022.11.20.)
- Carlos Garcia-Soto (21.6.14.), Sea level Rise in UN World Ocean Assessment and other UN Assessments,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Twenty-First meeting, United Nations.

CBD/COP/14/14

CBD/COP/DEC/15/4

EcoWatch 홈페이지, <https://www.ecowatch.com/global-plastics-treaty-negotiations.html>(검색일: 2022.12.10.)

Fernando Siringan (2021.6.16) Sea-level rise, its impacts, and compounding factors in the Philippines,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Twenty-First meeting, United Nations

Filimon Manoni (2021.6.16.) Sea-level Rise: Securing the Limits of the Blue Pacific,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Twenty-First meeting, United Nations.

Geneva Environment Network(2022.12.7.), Towards Plastic Pollution INC-1, <https://www.genevaenvironmentnetwork.org/resources/updates/towards-plastic-pollution-inc-1/>(검색일: 2022.12.12.)

Gcaptain(2022.12.14.), MEPC 79, <https://gcaptain.com/mepc-79-moving-ahead-on-ghg-reductions-green-corridors-and-onboard-carbon-capture/>(검색일: 2022.12.20.),

IMO, 'Lifecycle GHG – carbon intensity guidelines' <https://www.imo.org/en/OurWork/Environment/Pages/Lifecycle-GHG---carbon-intensity-guidelines.aspx> (검색일: 2022.12.10.)

Joanna Post, (2021.6.16.),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addressing the impacts and challenges related to sea level rise: Efforts under the UNFCCC,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Twenty-First meeting, United Nations

IISD 홈페이지(2022.3.7.), Highlights and images for 7 March 2022,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7Mar2022>(검색일: 2022.8.20.), (우) IISD 홈페이지(2022.3.8.), Highlights and images for 8 March 2022,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8Mar2022>(검색일: 2022.8.20.)

IISD 홈페이지(2022.3.8.), Highlights and images for 8 March 2022,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4-8Mar2022>(검색일: 2022.8.20.)

- 
- IISD 홈페이지(2022.7.22.), Highlights and images for The UN Ocean Conference, <https://enb.iisd.org/2022-un-ocean-conference-1jul22>(검색일: 2022.7.30.)
- IISD 홈페이지(2022.8.15.), Highlights and images for 15 August 2022, <https://enb.iisd.org/marine-biodiversity-beyond-national-jurisdiction-bbnj-igc5-15aug2022>(검색일: 2022.9.20.)
- IISD 홈페이지(2022.12.19.), Highlights and images for 19 December 2022, COP 15 of CBD, <https://enb.iisd.org/un-biodiversity-conference-oewg5-cbd-cop15-19Dec2022>(검색일: 2022.12.22.)
- IISD 홈페이지, “highlights of INC-1”, <https://enb.iisd.org/plastic-pollution-marine-environment-negotiating-committee-inc1-26Nov2022>(검색일: 2022.12.10.)
- IISD 홈페이지, INC-1 Final, Earth Negotiations Bulletin, Vol.36, No.7, 2022.
- Il nautilus(2022.12.18.), MEPC 79, [https://www.ilnautilus.it/trasporti/2022-12-18/mepc-79-accolti-con-favore-i-progressi-della-strategia-sui-gas-a-effetto-serra-dellimo-ma-e-necessaria-maggiore-chiarezza\\_107931/](https://www.ilnautilus.it/trasporti/2022-12-18/mepc-79-accolti-con-favore-i-progressi-della-strategia-sui-gas-a-effetto-serra-dellimo-ma-e-necessaria-maggiore-chiarezza_107931/)(검색일: 2022.12.20.)
- Nilufer Oral (2021.6.18.),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tudy Group on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Twenty-First meeting, United Nations
- Penelope Ridings (2021.6.16.), Coordinating Responses to the Challenge of Sea-Level Rise: Some Examples from the Pacific Region,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Twenty-First meeting, United Nations.
- Snjolaug Arnadottir, (2021.6.16.), Stability or Instability of Maritime Limits,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Twenty-First meeting, United Nations
- The Guardian(2022.11.5.), Global climate concern COP 27, <https://guardian.ng/news/cop27-fg-endorses-white-paper-on-harmonisation-of-global-climate-concerns/>(검색일: 2022.11.20.)
- Thomas James (2021.6.16.), A Canadian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and Impacts of Sea-level Rise,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Twenty-First meeting, United Nations.

TRADLINX, 'IMO(국제해사기구)의 EEXI&CII 규제내용 총 정리, <https://www.tradlinx.com/blog/guide/> (검색일: 2022.12.10.)

UKP&I, 'MEPC 79 – A Summary' <https://www.ukpandi.com/news-and-resources/articles/2022/mepc-79-a-summary/> (검색일: 2022.12.10.)

UNEP/EA.2/Res.11

UNEP/EA.3/Res.7

UNEP/EA.4/Res.6

UNEP/PP/OEWG/1/INF/1

UNEP/EA.5/25

UNEP/EA.5/28, Proceedings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at its resumed fifth session

UNEP 홈페이지, The triple planetary crisis(2020.7.14.),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speech/triple-planetary-crisis-forging-new-relationship-between-people-and-earth?gclid=Cj0KCQjw1OmoBhDXARIsAAAYGSG7pDAHOvggCMNRKWZ2JwDtpU9MnSja-lZk4E1tHwt9LTtCajbytuEaAnYoEALw\\_wcB](https://www.unep.org/news-and-stories/speech/triple-planetary-crisis-forging-new-relationship-between-people-and-earth?gclid=Cj0KCQjw1OmoBhDXARIsAAAYGSG7pDAHOvggCMNRKWZ2JwDtpU9MnSja-lZk4E1tHwt9LTtCajbytuEaAnYoEALw_wcB)(검색일: 2022. 9. 3.)

UNEP 홈페이지,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 <https://www.unep.org/about-un-environment/inc-plastic-pollution>(검색일: 2022.12.10.)

UNEP 홈페이지, '제5차 2부 총회 결과', <https://www.unep.org/environmentassembly/unea-5.2>(검색일: 2022.7.1.)

UNFCCC(2021), Organization of work, including for the sessions of the subsidiary bodies. Proposal by the President, Draft decision -/CMA.3. Glasgow Climate Pact,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cma2021\\_L16\\_adv.pdf](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cma2021_L16_adv.pdf)(검색일: 2022.12.12.)

UNGA/77/25, Zero Draft Ministerial Declaration UNEA-5

유엔 ICP 홈페이지, [https://www.un.org/depts/los/consultative\\_process/icp21/ICP21PanelistsSchedule\\_PostingVideos\\_.pdf](https://www.un.org/depts/los/consultative_process/icp21/ICP21PanelistsSchedule_PostingVideos_.pdf)(검색일 : 2022.11.20.)

---

일반사업 2022-07-01

## Post-2020 글로벌 해양환경규제 동향

---

인쇄 2022년 12월 31일

발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인 김 종 덕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

비매품

